

발 간 등 록 번 호

11-1312000-000018-10



2014

# 국가계약실무 편람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안전행정부





## 업무편람을 발간하면서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계약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약칭) 이외에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각기 다른 법령과 계약예규, 고시 등 수많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편람에는 계약의뢰에서 대가지급에 이르기까지의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과 실무적 이론 등을 담아 우리부 직원들이 업무에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계약 법령은 첫 장에 요약하여 한눈에 내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질문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사용 방법과 감사 지적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법적 책임 부분을 삽입하고,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책자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책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시대의 창조경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운영지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4. 3.

안전행정부 운영지원과장

# Contents

<b>제 1 편 총 관</b>	<b>1</b>
1. 계약실무	3
2. 계약처리절차 안내 및 참고서식	83
<b>제 2 편 계약 질의응답 모음</b>	<b>125</b>
1. 주요 질문사항 모음	127
2.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	149
3.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157
<b>제 3 편 학술(정책)연구용역 계약매뉴얼</b>	<b>181</b>
<b>제 4 편 인쇄물 계약 매뉴얼</b>	<b>199</b>
1. 인쇄계약 개요	203
2. 인쇄 용어 설명	205
3. 인쇄기준요금 적용방법(옵셋인쇄)	206
4. 인쇄기준요금 적용방법(경인쇄)	211
5. 견적서 서식	213



## **제 5 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안내.....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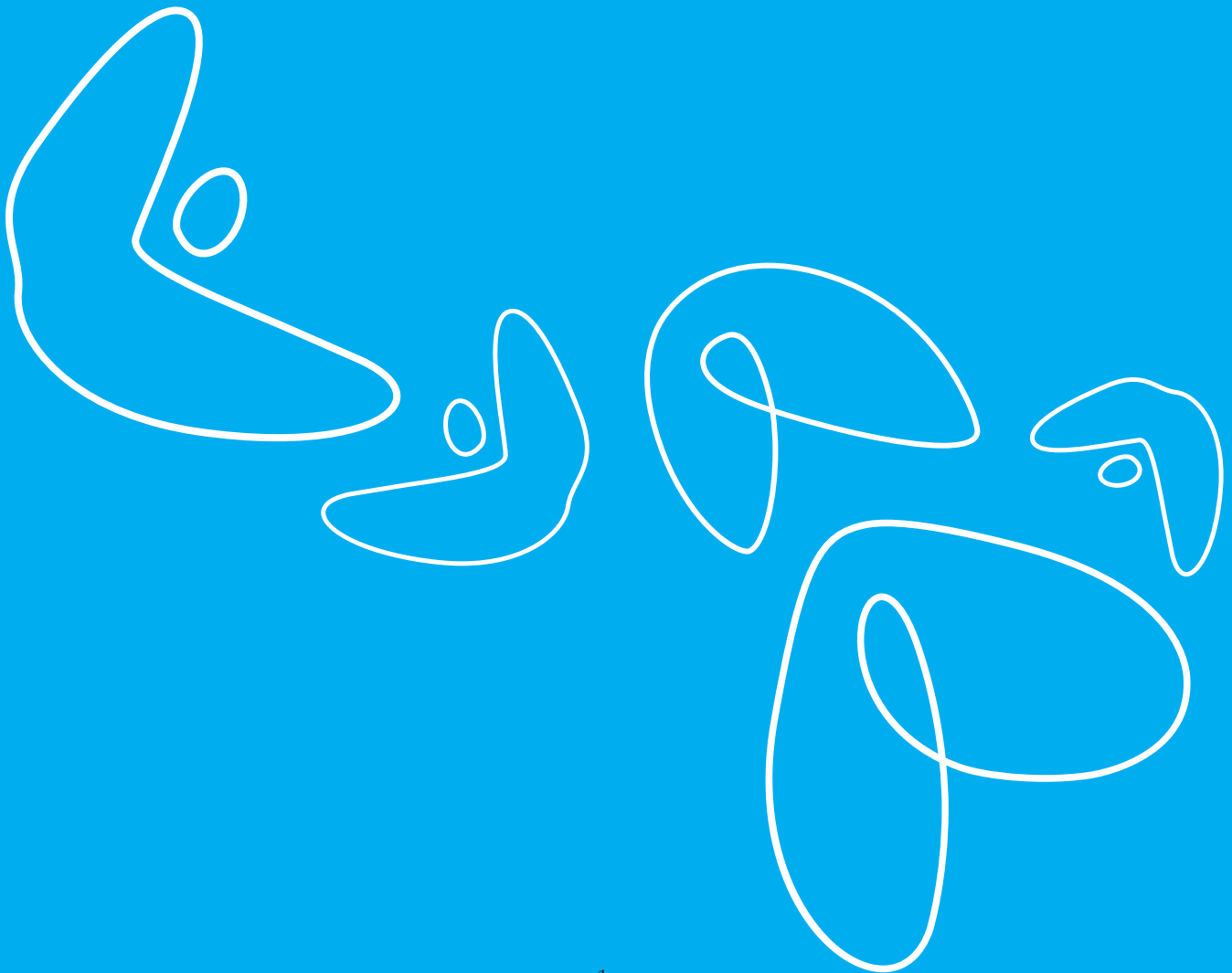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개요 .....219
2. 디브레인시스템 개인정보 변경방법 .....223
3. 디브레인 행정관서 및 관련관서 변경방법 .....227
4. 디브레인 사용자 권한변경 요청방법 .....237
5. 집행단위 관리방법 .....249
6. 계약 및 일반지출건 지출요청(원인행위) 작성방법 .....263
7. 분할지출요청서 작성방법 .....271
8. 지출금액조정요청서 작성방법 .....279
9. 차년도 용역계약 요청방법 .....285
10. 물품개요 .....293
11. 조달(계약) 물품구매 요청방법 .....307
12. 용역 계약 요청서 작성방법 .....319

## **제 6 편 국가계약 관련 법령 ..... 327**

- 제1장 회계 관련 법령.....329
- 제2장 계약예규 .....479
- 제3장 안전행정부 규정 및 기타 규정 .....487



# 제 1 편 총 괄







# 1. 계약실무



## 목 차

I. 계약과 계약관계법규 .....	7
1. 개 관 .....	7
2. 정부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	9
3. 정부계약의 종류 .....	10
4. 용어의 정의 .....	21
II. 수의계약 .....	23
III. 협상에 의한 계약 .....	26
IV.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32
1. 의 의 .....	32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 .....	34
3. 원가계산에 의한 감정가격의 결정 .....	36
4. 공사의 분할발주 · 계약 금지 .....	41
V. 입찰과 낙찰절차 .....	42
1. 개 관 .....	42
2. 입찰절차 .....	42
3. 낙찰절차 .....	50
4.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	53
VI.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55
1. 계약의 체결 .....	55
2. 계약의 이행 .....	58
3. 계약금액의 조정 .....	59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63

Ⅶ. 검사 및 대가지급 .....	66
1. 검 사 .....	66
2. 대가지급 .....	67
3.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	70
4. 지체상금 .....	72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74
참고1. 계약 의뢰 및 추진절차 .....	77
참고2. 예산 전용 및 내역변경 .....	79
참고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	81

## 1. 개 관

### 가.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 계약의 개념

-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중 사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사법상의 계약」이며,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이란 일반적으로 권력적, 공익적, 윤리적(비경제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공법상계약」이란 국가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 나. 계약관계 법규와 행정사무의 기준

#### (1) 계약관계 법규

- 법규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규범(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을 말한다. 국가계약법의 관련법규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국가계약법시행규칙」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및 1997년 1월 1일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특례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법시행령」, 「전기법시행규칙」등이 있다.

#### (2) 행정사무의 기준(계약예규 등)

- 예규라 함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단순히 계약내용을 예시한 지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이들이 계약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종의 계약예규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9조가 규정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인 각종 표준계약서의 붙임서류로 각종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규격 및 내용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을 규정하고 이들을 계약문서로 한 것은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국가계약법의 법적성질

-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으로는 종래 예산회계법상(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 2007.10.4 법률 제8050)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을 대체하는 법률을 따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이란 국가의 재정관리 작용 중 국가가 자기의 예산(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세입·세출준칙으로서 국법의 한 형식)·수입·지출·결산을 관리하는 작용을 규율하는 법규인바, 이들 관리작용은 그 성질에 있어 사법상의 재산관리와 다를 바 없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다만, 관리주체가 행정주체이고, 관리목적이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재정법의 제 규정은 사법원리를 법률로서 제한한 사법의 특별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수입·지출에 관한 국가재정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 : 대법원 1993년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8990판결)
- 따라서 종래 예산회계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한 제6장의 각 내용도 국가의 관리 작용의 일부로서 사법적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 계약법이 일반사법의 특별법적 성격이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도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사법원리에 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이렇게 볼 때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행하는 비권력적 예산회계(수입·지출)행정작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는 규범임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계약관계법규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결국 민법(사법)일반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계약관계법규가 특별히 규정한 내용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 즉 계약당사자가 국가(공공기관 포함)인 정부계약도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및 사정변경의 원칙 등 민법상 계약의 일반원리가 대부분 적용된다.

- 정부계약은 계약의 양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은 대부분 당사자간에 임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서 강행법규성을 갖고 있으나, 단속법규로 위반시 원인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국가계약법규의 위반이 계약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내부적으로 계약담당자의 징계·문책 등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2. 정부계약법령 체계 및 집행기관

### 가. 정부계약 기본법령

- 국가기관 계약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이,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한다)」이 각각 기본법령이라 할 수 있다.

### 나. 정부계약 관련 기타 법령·규정 등

- 기본법령 외에 국제입찰관련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등이 있다.
-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계약예규와 고시 및 회계통칙 등이 있으나, 이들은 법규성이 없어 위반시 계약담당자를 재제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 이 밖에 조달청의 계약업무를 규율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이 있고, 건설산업 기본법령, 전기공사사업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에도 계약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어 당해 분야의 계약에 있어서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 기타 정부계약에 관하여 위 관계법령 및 규정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그 일반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정부계약의 집행기관

#### (1) 계약집행기관의 이원화

- 현행 정부계약의 집행기관은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용하고 있다. 수요기관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조달물자 또는 일정한 시설공사계약은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에 요청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 (2) 자체계약(국가계약법 제6조)

- 정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계약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다른 투자기관 등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위탁처리 할 수 있다.

## (3) 조달청에 의한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

### (가) 조달청 계약체결 요청 대상

- 국가기관이 수요물자를 구매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외국산 물품의 경우에는 미합중국화폐 20만달러) 이상인 것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려는 수요물자가 조달청장에 의하여 체결된 수요물자인 경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국제법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
- 국가기관의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요청하도록 하거나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탁하고 있는 것

### (나)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계약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방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하여야 하는 경우
-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하는 경우
- 시공·감독, 하자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
-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정부계약의 종류

- 정부계약은 계약 목적물, 계약체결 형태, 경쟁 형태,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각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경쟁형태 및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종류에서 구체적인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그 기준이 된다.



## 가. 계약목적물별

### ① 공사계약(일반, 전문, 전기, 정보통신), ② 물품제조·구매계약, ③ 용역계약

- ※ 물품의 제조인지 공사인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사가 아니면 물품의 제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 ※ 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용역,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등이 있다.

## 나. 계약체결 형태별

### (1)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2) 총액계약, 단가계약

### (3)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 (4)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 (5)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① 확정계약,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확정계약

- 계약금액의 확정여부에 따라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으로 구분되며, 국가계약법상으로는 확정된 계약금액에 의한 확정계약이 원칙이다.

#####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개발신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정부투자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미리 예정가격이나 계약금액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 개산가격을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개산계약은 개발신제품 제조, 시험·조사·연구용역 등에 국한하여 체결되는 반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주로 선박 등 첨단부품 수입 및 제작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수품 구매 등에 활용된다.
- 개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정산 후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잠정계약금액을 정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예정가격 결정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제1항·3항).
-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수량·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예정가격결정기준과 위 원가검토 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제3항).
- 사후정산은 계약당시에 정한 개산가격이나 잠정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함이 원칙이나, 발주기관의 요구로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고려하여 정산하여야 하고(회계41301-1498, 1997.6.9), 정산처리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회계41301-1788, 2001.9.11).

## ②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 총액계약

- 총액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계약법령에 의한 원칙적인 계약방법이다.

### 단가계약

- 단가계약은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이 필요할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목적물의 단위당 가격 즉, 단가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국가계약법 제22조).

## ③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 단년도계약

- 계약이행기간을 기준으로 단년도 계약과 장기계속계약으로 나뉘며, 1회계연도(1.1~12.31)내에 계약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는 단년도 계약이 원칙이다(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것임).

※ 회계연도를 걸쳐서 하는 계약은 안 됨(예, 2006. 3. 1 ~ 2007. 2. 28(X)).

## 장기계속계약

- 장기계속계약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계약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의 이행은 각 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21조).
- 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제1항)
- 사업내용은 확정되었으나 장기간 계속될 사업으로 업체가 바뀔 경우 하자보수의 곤란, 예산확보가 불확실한 경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주로 활용된다.
- 사업내용이 확정되어야 하고, 입찰은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2차년도 이후는 부기된 총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행되도록(계약체결)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부기된 총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지 않는 이상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 계속비계약

- 계속비계약은 국회의결을 받아 확보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하며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수계약이 없고 계약시 매 회계연도 연부액이 부기된다. 따라서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

※ 단년도계약 · 장기계속계약 · 계속비계약의 비교

구분	단년도계약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사업내용확정여부	확 정	확 정	확 정
총예산 확보여부	확 보 (당해 회계연도)	미확보 (당해 회계연도분만 확보)	확 보 (여러 회계연도)
계약체결 방법	당해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입찰 및 계약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후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및 계약 (연부액 부기)

#### ④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

##### 단독계약

- 계약당사자 수에 따라 단독계약, 공동계약, 종합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1대 1인 단독계약이 원칙이다.

##### 공동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발주관서와 체결하는 계약을 공동계약이라 한다(국가계약법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2조제1항).
-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아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구분되며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제173호, 2014.4.1)
- 공동계약은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경쟁계약에 있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특별히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이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연명으로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계약이 확정된다(국가계약법 제25조제2항).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의 공사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4항).
- 다만, 해당지역에 공사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의무가 없고, 지역 내·외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등 지식기반사업 중 수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2).

##### 종합계약

- 종합계약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계약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4조제1항).

- 종합계약은 주로 도로의 점용·굴착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소음 등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택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에서 도로·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 등 간선시설공사를 예산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는 조달청장이 심사하며, 종합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71조).

#### ⑤ 회계연도 내 계약 및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회계연도 내 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후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내 계약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으로 구분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회계연도 개시 후 체결하는 계약이 원칙이다.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 다만, 임차·운송·보관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20조).

### 다. 경쟁 형태별

#### (1) 일반경쟁입찰계약

- 정부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며(국가계약법 제7조), 이 때의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하도록 규정(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제2항).
- 일반경쟁계약은 관보, 일간신문, 게시판 등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일반경쟁계약에서도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즉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하여야 하고 허가·인가·면허 등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자격은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다(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 \* 필요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법정자격요건을 갖춘 것
- \* 필요시 보안요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적합판정을 받았을 것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지자 일 것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및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자격요건(3가지 모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규칙 제18조).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거나 용역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 위 첫째 자격요건(허가·인가·면허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

○ 경쟁 입찰참가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재제 기간 중에 있는 자(동법시행령 제76조) : 후술
-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동법시행령 제15조)

○ 입찰참가자격의 증명과 등록(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인·허가요건, 보안요건 등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그 사실을 서류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6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게 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증에 의하여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4조제3항).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등 법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자에게는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 교부된다(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 제4항).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록사항 변경시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7항).

【입찰참가 자격유무 판단 기준일 (회계통첩, 2002.6.18)】

- 제조·구매·용역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접수 마감일
- 공사의 경우, 제조와 동일하나 현장설명참가자 의무인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 중인 경우, 위 서류접수 마감일 및 현장설명일 전일까지 제재·정지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요건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시키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심사방법과 절차는 계약예규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계약예규 158호, 2014.1.10. 이하 ‘사전심사요령예규’)」에 따라 시행한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적격자에게는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 사전심사 대상공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로서 교량·공항·항만 건설공사 등 규정에서 열거한 19개공사 다만,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중에서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일괄·대안입찰 대상 공사는 제외

○ 적격자 심사 및 선정(사전심사요령예규 제6조 내지 제9조)

경영상태부문(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상태비율)과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시공 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신인도)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경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 능력부문을 심사하여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사전심사방법으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공동계약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2) 제한경쟁계약

- 제한경쟁계약이란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계약실적 또는 기술보유정도 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모든 입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공공부문 공사계약에서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실제 활용도가 높은 제도이다.
- 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에 관한 관련기준은 제한경쟁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구체적인 제한대상과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 156호, 2014.1.10)」에 따른다.
-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사항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하며,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동종 공사실적
  -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공사실적
  -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물품의 제조실적
  -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의 용역수행실적
  -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전문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공사는 7억원)미만인 공사계약 및 물품제조·구매·용역·기타계약 등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 공사를 성질·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미리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아 유형·등급별로 적격자를 선정·등록하고 공사입찰시마다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 ㉨ 계약담당자가 특별히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제조, 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자인지 여부



○ 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되,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의 실적을 우선 적용한다.

-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을 금액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 목적물의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시공능력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당해 추정가격의 2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현장,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제4항).

○ 제한기준의 적용(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실적 또는 시공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경쟁입찰 대상 및 제한사항의 각 항 또는 각 항내의 사항”을 중복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공사에 필요한 특수기술·공법의 보유상황 또는 동종 공사실적’에 의하여 참가자격을 중복 제한하는 것은 무방하다(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

**(3) 지명경쟁계약**

- 지명경쟁계약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 또는 실적이 있는 자 등을 지명하여 경쟁 입찰에 참가시키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법이다.
- 지명경쟁계약은 특정인을 정실지명하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어, 국가계약법령은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한관련 기준은 지명경쟁입찰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상과 지명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에 따른다.

○ 지명경쟁입찰의 대상

-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실적 등의 보유자가 아니면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단, 이러한 사유로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항).
- ㉡ 추정가격 3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억원)이하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재산의 매각 또는 매입
- ㉣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물건의 임대·임차
- ㉤ 공사나 제조의 도급, 재산의 매각 또는 물건의 임대·임차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 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산업표준화법 제15조)또는 품질경영체제인증(품질 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동법시행령 제26조)
- ㉧ 법적 우선구매대상인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 인증품(E마크)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법정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위 “지명경쟁입찰의 대상”중 ㉠·㉡·㉢·㉤·㉥의 사항에 해당되어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27조).

- 공사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지명하고,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유자를 지명
- 물품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

○ 입찰대상자 지명 및 통지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입찰대상자로 지명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

입찰대상자(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에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제반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위의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이 없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입찰참가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30조).

#### (4) 수의계약 : 별도 설명

### 4. 용어의 정의

○ 중앙관서의 장 (국가계약법 제4조 제3항, 국가재정법 제6조)

- 국가계약법에서 사용하는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자를 말한다.

- ① 국회의 사무총장
- ② 법원 행정처장
- ③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 ④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 ⑤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계약담당공무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에 열거한 자를 말한다.

-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② 재무관(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 포함)
- ③ 계약관(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 포함)
-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 분임, 대리분임 포함)
-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 계약관 (국가계약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계약관이라 하고,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대리계약관,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은 분임계약관, 분임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은 대리분임계약관이라 한다.

○ 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 재무관이란 소속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즉, 지출원인행위의 대부분이 계약행위라 할 수 있는데, 각 중앙관서별로 계약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않고, 재무관으로 하여금 계약에 관한 사무와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재무관이 계약사무와 지출원인행위사무를 겸직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대리재무관 및 분임재무관도 포함된다.

계약관과 재무관은 모두 계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지출원인행위는 계약관은 할 수 없고 재무관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관과 재무관이 별도로 임명되어 있는 경우 지출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관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관한 서류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리관 : 지방재정법상 지출원인행위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 ○ 지출관(국고금관리법 제22조)

- 중앙관서의 장의 임명을 받아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출납기관(한국은행 또는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에 지출을 명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지출관 외에 대리지출관, 분임지출관, 대리분임지출관이 있다. 지출관은 재무관 또는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 추정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7조)

-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조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추정금액(국가계약규칙 제2조)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 예정가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 제7조의 2)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등 세액을 포함하여 결정하며, 관급 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Ⅱ

## 수의계약

### 1. 의 의

- 수의계약이란 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 경쟁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항)은 수의계약에도 그대로 적용(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제외)되며, 인·허가요건, 보안요건 등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하여 각각 증명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 가. 수의계약의 대상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 ㉣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해장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 ㉧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 ㉩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 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 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 ㉼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마)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 제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 ㉿ 물품을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 Ⅲ 협상에 의한 계약

#### 제1절 개 요

#####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물품·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지식기반사업의 우선 적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①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사업
  - ③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 ④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 ⑥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디지털 콘텐츠산업
  - ⑦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 ⑧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2014.1.10)



### 3. 협상계약 절차



## 제2절 입찰공고 및 제안서

### 1. 입찰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4조]

-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공고 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입찰공고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고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 ② 해당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 ③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 ④ 제안서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 ⑥ 제안서의 제출기간
- ⑦ 제안서의 내용
- ⑧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 그 사유 포함)
- ⑨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7조의2]
  - ※ 입찰공고 전 규격검토 및 공개 [구매업무처리규정 제9조, 제21조]
  - 조달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규격을 검토한 후 규격공개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 협상계약 우선적용 대상 여부
-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기타 협상계약절차에 관한 사항
- 기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지침 제21조에 정한 사항
- 규격검토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일간(긴급시 3일) 구매규격을 공개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2. 제안요청서

### 가. 제안요청서 교부 및 설명[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상기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나. 제안요청서 교부자로 입찰참가 제한[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지침 구매업무처리규정 제47조의2]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를 교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과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본제안서와 세부

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요청서 교부대상자를 제한하는 근거와 제안요청서를 교부하는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 다. 제안요청서 내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5조 제5항]

- 제안요청서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

- ① 과업내용
- ② 요구사항
- ③ 계약조건
- ④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⑤ 제안서의 규격
- ⑥ 기타 필요한 사항

#### 라. 제안서 등의 제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6조]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제안서(규격입찰서)는 표지와 매장마다 간인을 날인하여 평가담당기관에 인계하여 기술능력 평가 의뢰한다(원본 CD 1매는 입찰집행관이 보관)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입찰가격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마. 제안서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분 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 · 지식능력</li> <li>• 인력 · 조직 · 관리기술</li> <li>• 사업수행계획</li> <li>• 지원기술 · 사후관리</li> <li>• 수행실적</li> <li>• 재무구조 · 경영상태</li> <li>• 상호협력 등&lt;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gt;</li> </ul>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평가		20	

## 2)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상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 ·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 · 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 · 감 조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times (\frac{\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text{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SW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신설 2014.1.10>

○ 입찰가격 평가

-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함

※ 협상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계약령 제7조의2).

○ 기술능력 평가방법

- 외주근로자 조건은 시행규칙 제23조의 3 각호에 해당하는 단순노무용역이 포함된 용역에 한해 평가하며 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기준은 적격심사에서 단순 노무용역에 적용되는 낙찰 하한율을 고려하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신설 2012.5.1>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지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단,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1.10>

### 3.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및 제9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위원회는 각 중앙관서별로 그 중앙관서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IV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1. 의 의

#### 가. 추정가격

##### (1) 추정가격의 개념

-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결정전에 국제 입찰 대상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2조).
- 국가계약법령상 추정가격은 계약방법을 금액기준으로 선택할 때, 입찰절차에서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과할 때 등 제반 절차와 행위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

#####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동법시행령 제7조)

- 추정가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급자재비와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① 단가계약의 경우, 당해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 ②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또는 직전 12월 동안)에 체결된 유사계약의 총액을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또는 「동일 회계연도(또는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 ③ 물품·용역의 리스·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 미확정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1월분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 ④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추정금액이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추정금액을 추정가격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 제25조 제2항제1호 나목).

## 나. 예정가격

### (1) 예정가격의 개념

- 예정가격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계약담당자가 미리 작성·비치해 두는 가액을 말하며,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2조·제7조2).
- 예정가격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2)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7조2제2항).
  - ①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로서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8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 ③ 추정가격(임차·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 ④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3) 예정가격 변경

- 최초 입찰시 작성된 예정가격은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27조제3항).
- 다만,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재공고입찰을 하였는데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 조차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13조).

【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의 비교 】

구 분		추정가격	예정가격
차이점	작 성 목 적	계약방법 등 판단기준	계약상대자·계약금액 결정기준
	작 성 시 기	계약방법 결정전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
	부가가치세	제 외	포 함
	공 개 여 부	공 개	비 공 개
공통점	작 성 자	발주기관·계약담당자	
	관급자재비	제 외	

#### (4) 예정가격의 결정절차

① 예산가격 ⇒ ② 추정가격 작성 ⇒ ③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④ 기초금액 작성  
⇒ ⑤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⑥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⑦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과정에서 기술·설계담당 직원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계약 담당자가 그 적정여부를 검토·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다.

##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기준

###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공사·수리·가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 설계서·규격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 등이 확정된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총공사·총제조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
-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단가에 대하여 결정하되,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의 단가는 입찰대상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예정 가격조서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1) 결정기준 개요

-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 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②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때 원가계산가격
  - ③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 ④ 위 세 가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위 네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액을 포함시켜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2) 예정가격 결정기준간의 적용순서

- 예정가격 결정기준 적용시 먼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가격」, 이와 같은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등」에 의하면 될 것이다.
- 공사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실적공사비와 원가계산가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된다.
- 감정가격·유사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은 다음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동법시행규칙 제10조).
  - ① 감정가격 :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사평가사(사업자등록필)가 평가한 가격
  - ② 유사거래실례가격 :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 ③ 견적가격 :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 (3)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에 의하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 ①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 가격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③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위 3가지 가격 간에 우선순위는 없으므로 발주목적물의 내용·특성·현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 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3. 원가계산에 의한 감정가격의 결정

#### 가. 원가구성 비목

##### (1) 공사·제조·국내구매·용역의 경우(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재료비 : 규격별 소요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 노무비 : 공종별 소요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 경 비 : 비목별 소요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 재료·노무·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 (2)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동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료,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 위 항목 외에 창고보험료, 수입추천수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포함시킨다.

#### 나.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적용기준과 순서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구성 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다음의 가격의 의하되, 그 적용순서도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① 거래실례가격 또는 지정기관(통계법 제15조)이 조사·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 ②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 위 거래실례가격 또는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  
에는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사용하는 경우
  - ②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다. 원가계산 주제 및 원가계산서의 작성

### (1) 원가계산 주제(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원가계산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자산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 ③ 민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④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2) 원가계산서의 작성(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항)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 (1)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에도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장관이 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원가계산의 준칙(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 정부계약의 원가계산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9조 및 「예정가격 작성

기준(계약예규 157호, 2014.1.10)」에 의하고, 예규 등에 없는 세부사항은 기업회계 방식을 따른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한 사유로 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보칙).

## 라. 원가계산의 실제

### (1) 원가계산의 체계

- 예정가격 : 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부가가치세
- 총 원 가 : 공사(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제조)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① 재 료 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②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 ③ 경 비 : 전력비, 보험료 등

### (2) 제조·공사 원가계산

#### (가) 재료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

- 재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말한다.
  - ①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가치로서, 목적물의 기본적 구성 형태를 이루는 주요재료비와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부분품비(경비로 계상된 것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 ②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소모성 물품의 가치인 소모재료비, 감가상각대상이 아닌 소모공구·기구·비품비(내용 연수 1년 미만), 포장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 재료구입과정에서 발생한 운임·운송보험료·보관비 등은 재료비에 포함되나, 구입 이후 발생한 부대비용은 경비에 포함된다.
-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품·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노무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 재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 ① 직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서, 기본급·제수당(기본급에 포함된 수당 제외)·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 ② 간접노무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현장감독자 등의 노동력에 대한 가치로서, 기본급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 간접노무비는 표준품셈 또는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를 곱하여 계산하며, 직접노무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경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 제조·공사에 소요된 제조원가(비용) 중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 ①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18종과 기타 법정경비가 제조·공사에 공통으로 인정된다.
- ② 감가상각비·수리수선비·시험검사비 3종은 제조경비로, 기계경비·품질관리비·가설비·환경보전비·보상비·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7종은 공사경비로 각각 인정된다.
- 경비는 제조·시공기간 동안의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계약서·영수증 등을 근거로 직접 산정하지만, 직접계산이 곤란한 간접경비는 기업회계의 경비배부방식에 따라 계산하여 최소금액으로 결정한다.

**(라) 일반관리비(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

- 일반관리비는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부문(본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직원인건비, 후생복리비, 차량비 등으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는 제조·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에 제품종류·공사규모별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제품종류·공사규모별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공사의 경우 상한율 6%를 기준으로 공사규모에 비례하여 체감적용하며, 용역의 경우에는 5%를, 물품제조의 경우에는 제품종류별로 정해진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한다.

**(마) 이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4조)**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재료비를 제외한 제조·공사원가(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이윤율은 공사의 경우 15%를,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25%(수입물품 10%)를, 용역의 경우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바) 공사손해보험료(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2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와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
- 손해 보험료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 관리비·이윤의 합계액)에 공사손해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관급자재가 있을 때에는 총공사원가에 관급자재를 합하여 계상하며, 손해보험 요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사) 부가가치세(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3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전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예정가격에 합산시킨다.

**(3) 용역 원가계산**

**(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동법시행규칙 제9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 내지 제29조)**

- 원가계산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되며, 원가계산서를 작성 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한다.
-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로 기준단가에 의하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 경비는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 통신비, 감가상각비 등 8종이 있으며,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각각 5%·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기타용역 원가계산(동법시행규칙 제9조,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할 수 있다.

## 4. 공사의 분할발주·계약 금지

### 가. 개 요

-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일괄하여 계약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8조).
- 동일구조물공사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공작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 단일공사란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하며,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는 단일공사로 본다.

### 나. 분할발주·계약이 허용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발주·계약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68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장」).
- 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
- ② 공사의 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하여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도로, 하천, 철도, 지하철, 농지개량, 공업단지조성, 항만공사 등)
- ③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V

## 입찰과 낙찰절차

### 1. 개 관

#### 가. 입찰

- 입찰이란 경쟁계약의 상대방으로 결정되기를 희망하는 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입찰공고, 서류의 열람·교부, 참가신청, 입찰서 제출 등 일련의 절차로 진행된다.
- 일반적인 입찰방법 이외에 특수한 입찰방법으로는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 입찰, 2단계 경쟁 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 등의 방법이 있다.

#### 나. 개찰 및 낙찰

- 개찰이란 입찰서제출 마감후 지정된 장소에서 입찰자가 참석한 가운데 입찰서를 개봉하는 행위를 말하며, 낙찰이란 입찰결과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법에는 최저가낙찰제, 제한적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낙찰제,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 등의 방법이 있다.

#### 다. 전자입찰제도

- 정부입찰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입찰관련 일련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였다(2000.12.27.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 현재, 일정금액 이하의 시설공사계약 및 물품의 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전자입찰로 할 수 있다.

### 2. 입찰절차

#### 가. 입찰공고

##### (1) 공고방법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3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의 내용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① 국가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법시행령 제34조)
- 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경우(동법시행령 제13조)
- ③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동법시행령 제21조제3항)
- ④ 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의 경우(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 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 (2) 입찰공고의 시기(동법시행령 제35조)

-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5일전(협상에 의한 계약은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다음의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②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③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 전자정부법 제45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13.8.27) 제27조(입찰 공고 기간)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①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 ②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25일
  - ③ 40억원 이상인 경우 30일

## (3) 입찰공고의 내용

- 입찰공고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등 18개 사항과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6조).

## 나. 입찰관련 서류의 작성·비치·열람·교부

### (1) 공사의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 (2)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입찰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희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 다만, 추정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희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입찰관련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 공사의 현장설명

-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추정가격 300억 이상은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현장접근의 어려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4조의2제1·2항).
- 공사의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의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4조의2제3항).
  - ①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는 7일 이전
  - ②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공사는 15일 이전
  - ③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33일 이전

### 【 현장설명 참가자격 】

- 현장설명참가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당 기술자로 인정된 자(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업체만 참가가능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2조)

## 라. 입찰참가신청

### (1)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제출(동법시행규칙 제40조)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유의서와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는 내용이 담긴 소정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서 위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2) 입찰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국가계약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하여금 낙찰후의 계약체결을 보장하는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단가입찰은 단가×총입찰예정량)의 5% 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각종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한 보증서중 회계연도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한 보증서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유가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7조제2항).
- 보증서·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입찰서제출 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기본재산 50%이상)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정한 자에게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37조제3항).
-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의무 불이행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7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라) 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종료 후 청구에 따라 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하나, 낙찰자가 원할 경우,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국가계약법 제9조제2항).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보증기관·관계수입징수관 등에 통지하고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받은 자에게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세입징수관에게 지급확약 문서를 갖추어 통지하고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

#### 마. 입찰서 제출

##### (1) 입찰서의 제출

-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국제입찰대상계약인 경우 및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39조제1~2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입찰서는 1인 1통으로 하며,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교환·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기재내용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참가자가 취소의사를 표시하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면 가능하다(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
-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하며, 다를 경우 입찰무효의 사유가 된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5호).

##### (2) 입찰금액의 기재 및 첨부자료(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 제16조제5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바. 입찰의 성립·연기 및 무효

### (1) 입찰의 성립과 연기

-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하며,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일시 및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11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
- ① 입찰희망자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한 입찰관련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등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 ②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2) 입찰무효의 사유(동법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

-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②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③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④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⑤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 ⑥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⑦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⑧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이하 이 호에서“제안요청서 설명”이라 한다)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 ⑨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⑩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 ⑪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 ⑫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 ⑬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⑭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⑮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⑯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 ⑱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⑲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⑳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㉑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㉒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 ㉓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 (3)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참가 입찰자들에게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45조).

- 다만,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입찰무효 관련 유권해석 사례】

- 낙찰자로 선언된 자가 확인결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붙여야 함  
(회제 45107-1013, 1993.9.17)
- 낙찰자 결정 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
- 낙찰자 선언 없이 입찰 서류의 정확한 검토 등을 위해 낙찰 예정자를 선언한 경우, 동 낙찰 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면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회제 45101-743, 1996.4.12)
- 계약담당자의 잘못(입찰서상의 입찰금액 확인 착오로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경우 등)으로 낙찰이 결정된 경우, 당해 낙찰을 취소하고 정당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  
(회제 41301-1273, 1998.5.29)
- 내역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이 배부한 물량내역서 상에서 정한 안전관리비용율 등을 초과하여 산정·기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입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입찰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 수정가능(회제 41301-1273, 1998.5.29)
- 입찰금액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이를 입찰무효사유로 볼 수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일정액 이상의 시공능력 공시액으로 정하였다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보아 무효사유에 해당  
(회제 41301-582, 1998.4.15)

## 사. 공사입찰의 실제

### (1) 다량물품의 입찰(희망수량에 의한 경쟁 입찰)

- 다량의 물품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경우, 매각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의 매수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함께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상의 단가입찰자 중 최고가격 제시자부터 순차로 계약목적 총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5조).
- 다량의 물품을 일반경쟁입찰로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함께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순차로 수요총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복수의 낙찰자로 결정한다(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46조).

**(2) 2단계 경쟁 입찰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 2단계 경쟁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1단계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확정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기술)과 가격의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서를 개찰하여 적격자를 확정하고,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에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기술) 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기술) 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은 규격 적격자가 1인 뿐이라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48조).

**(3) 유사물품복수경쟁입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5조)**

- 품질, 성능,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물품 중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것만 지정하여 복수경쟁에 부친 때에는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로 결정한다.

**(4) 공모에 의한 계약**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53~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성·창작성이 요구되는 설계·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예술성·창작성이 가장 뛰어난 업체와 설계 또는 시공계약을 체결한다.

**3. 낙찰절차**

**가. 낙찰자 결정방법**

**(1) 개 요**

-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을 개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
-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낙찰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



-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 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동법시행령 제40조제3항).

## (2) 낙찰자 결정원칙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시행령 제41조).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 (3) 낙찰자 결정방법의 유형

- ① 최저가 낙찰제 :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②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 예정가격 일정비율(90%) 위로 가장 낮게 입찰한 자
- ③ 적격심사 낙찰제 : 최저가격 입찰자 중 당해 계약이행 적격심사 통과자
- ④ 종합낙찰제 : 입찰가격 이외 품질 등을 종합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
- ⑤ 희망수량 낙찰제 :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총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
- ⑥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 공급자와 협상을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나. 적격심사제

### (1) 의 의

-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입찰자 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동법시행령 제42조).

### (2) 적용대상 및 심사기준

- 경쟁 입찰에 부치는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
- 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입찰 및 2단계경쟁입찰 또는 기술(규격)·가격 분리입찰, 이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②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159호, 2014.1.10)」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하되, 공사 등의 특성상 필요시에는 각 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42조제5항).

### (3) 적격심사의 실제(공사의 경우)

#### (가) 세부심사기준(적격심사기준 제5조·제6조)

-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및 배점한도 등은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별표에 따르되, 「해당공사 수행능력(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한다.
- 다만, 공사종류별로 특성·목적·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나) 심사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적격심사기준 제7조)

- 「해당공사 수행능력」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하되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이용하며, PQ대상외의 공사는 PQ 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입찰가격」은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되, 텀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하여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30점, 50점 등)을 주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감점되도록 산식을 구성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 =  $30 -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 공동계약 공동수급체에 대한 분야별·항목별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공경험·시공기술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 ②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다) 낙찰자의 결정(적격심사기준 제8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중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위의 경우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 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종합낙찰제

- 특정물품의 제조·구매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 종합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열람시켜야 한다(동법시행령 제44조제2항).

#### 라. 입찰가격이 동일 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47조, 시행규칙 제46~47조).
- 2단계경쟁입찰 또는 기술(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기술(규격)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수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4.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 가. 재입찰

- 재입찰은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횟수제한 없이 계속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20조).

#### 나. 재공고입찰

- 입찰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일간의 공고절차를 거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한다.

○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위 재입찰의 경우에도 같다(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항).

※ 계약의 해제·해지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입찰과 구분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만으로 성립하지만, 정부계약은 계약서의 작성으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입찰(승낙)과 계약서작성간의 관계가 문제된다.
- 민법상 입찰은 예약(본 계약 체결의무 부과)으로 볼 수 있어 국가계약법상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념상 예약(입찰)과 본 계약(계약서작성)이 있게 된다.
- 따라서 입찰가격 또는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 후 낙찰자만을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함(질의회신, 회제41301, 1998.7.15).

## Ⅵ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계약의 체결

#### 가. 계약체결 기간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존속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의 낙찰자는 소정서식의 구비서류와 산출내역서를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7조).

#### 나. 계약서의 작성

##### (1)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 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
-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 계약문서라고 하면 계약서외에 설계서(도면·규격서·시방서·현장설명서 등), 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다.

##### (2) 계약서 작성의 생략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49조).
  - ①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인 계약
  - ② 경매에 부치는 경우
  - ③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하는 매각계약
  - ④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⑤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상 계약서가 불필요한 경우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0조).

## 다. 계약보증금과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1) 계약보증금

#### (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담보하고 불이행시의 손해보전을 위한 물적 담보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50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장기계속계약은 제1차 계약체결 부기한 총공사비 또는 총제조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은 입찰보증금의 경우와 같이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50조제7항).
-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 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0조제8항).
-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게 하거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62조).

#### (나) 계약보증금의 납부면제

-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0조제6항).
-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법인(기본재산 50%이상), 각종 협동조합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② 5,000만원이하의 계약의 경우, 일반관습상 보증금징수가 부적합한 경우
- ③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물품공급이 곤란한 경우

-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계약관습상 면제 경우 제외)에는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50조제10항).

**(다)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국가계약법시행령 제51조)**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5조제1항).
  - ※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 불이행으로 당해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회제 1210-2187, 1983.7.12)
  - ※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방이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로 수납할 수 없음

**(2) 공사이행의 이행보증(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공사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 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의 15%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 ②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상의 의무이행 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계약담당자는 공사이행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보증방법을 위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고, PQ대상공사로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
- 공사이행보증업체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보증방법 비교(공사의 경우)】

보증방법	계약 불이행시	
	1차적	2차적
계약보증금 15% 납부	계약보증금액 전액 국고귀속	-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불행시40% 납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책임 보증시공	책임보증시공 불이행시 전액 국고귀속

【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병과여부 】

- 지체상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바,  
 - 계약보증금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전제되고, 지체상금은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지연된 것이 전제되므로 병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회제 45101-922, 1995.6.22)

## 2. 계약의 이행

### 가. 계약의 이행착수

- 계약이 체결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용지, 관급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착공신고서 제출 하는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 14조 제6항).

### 나. 계약이행에 대한 감독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3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책임감리대상 공사와 감독에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대행하여 감독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



- 현장감독관은 계약상대방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임의로 설계변경, 기일 연장 등 계약내용이나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감독공무원 수를 배치기준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

### 3. 계약금액의 조정

#### 가. 개 관

- 정부계약이 확정계약이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여건변화나 지정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초의 계약내용을 강제하는 것보다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다.
- 국가계약법령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변경을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 위 3가지 유형 외에 다른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계약법 제19조).

####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조정요건(동법시행령 제64조)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2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계약 금액(장기계속계약은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조정한다.
  - ①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계약은 1차계약)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할 것
  - ②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비목의 가격 등락으로 인하여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되었을 것
- 조정기준일(조정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천재지변·원자재가 급등 등으로 조정제한 기간 내에 조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최초조정 포함)할 수 있다.
-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위 품목조정 또는 지수조정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조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 (2)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가) 의 의

-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 (나) 조정방법

【 주요개념 및 산출산식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 계약금액 조정완료액 = 당초계약금액 ± 조정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품목조정율 =  $\Sigma(\text{등락폭} \times \text{수량}) / \text{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등락율 =  $(\text{물가변동 당시가격} - \text{입찰 당시가격}) / \text{계약체결 당시가격}$

### ① 등락율의 산정

- 물가변동 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 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7항).

### ② 등락폭의 산정

-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 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말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1항).
- 등락폭의 산정은 계약단가와 입찰당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가격 상호간의 수준에 따라 다음의 2가지로 계산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 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가격 인 경우  
⇒ 등락폭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 입찰 당시가격 < 물가변동 당시가격 < 계약단가 인 경우  
⇒ 등락폭 = 0(零)

- 등락폭은 계약조건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된다.
-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배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회계125-1823, 1991.7.24).

### ③ 품목조정율의 산정

- 원가계산방식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2항).

### ④ 물가변동 적용대가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공정)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3)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동법시행규칙 제74조 제4항)

### (가) 의 의

- 계약금액 산출내역의 제비목군이 순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가중치와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분류지수 등의 시점(계약체결 및 물가변동)간 변동률을 이용하여 산정한 지수조정율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 이 경우에도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가 조정대상이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은 제외된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며,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156호, 2014.1.10)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을 산출」 참조

## (4) 선금의 공제 및 물량의 조정 등

-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출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 등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 또는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
- ⇒ 공제금액 = 물가변동 적용단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금액

-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준공대가지급 후에는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으나, 준공대가 지급 전에 조정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 2200, 1992.10.30).

##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의의(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1항)

- 설계변경이란 공사의 시공도중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태의 발생, 공사물량 증감, 계획변경 등으로 당초계약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되는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수행이 필요한 때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변경 시기 등을 명확히 하고 설계변경 전에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2) 계약금액 조정단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2)

- 증감되는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발주기관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공사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이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계약금액 조정방법 등(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2)

-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여 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일반관리비와 이윤율은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라. 기타 계약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 의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주요유형(유권해석 사례)

- 토취·토사장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른 운반거리 또는 운반방법의 변경, 지질조사서와 실제현장의 불일치, 공용으로 면제하였던 토사 채취료를 다시 징수하게 된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또는 단축 등이 있다.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등도 해당된다.(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예규 제175호, 2014.4.1.일부개정)

### (3) 조정기준

- 이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동법시행령 제66조).
- 실비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규칙소정의 비율 범위 안에서 산출내역서상의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5조)

### 가. 의 의

-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사에 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소급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 계약의 해제는 주로 임시적 계약관계(일정한 시점에서 급부가 이루어지는 매매 등)

에서 발생하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일정한 기간동안 급부가 이루어지는 공사  
도급·임대차 등)에서 발생한다.

## 나. 해제 및 해지의 사유

### (1) 개 설

- 해제 및 해지의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의한 해제·해지의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한 해제·해지사유가 있다.

### (2)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 (가) 공사계약의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인 경우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공사지연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또는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술용역계약의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 위 공사계약의 경우와 유사
-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

-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7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

**(4) 계약상대자가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46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된 경우, 공사 정지기간·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공사기간·계약기간의 50/100을 초과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각 기관에서 자체회계규정으로 계약의 해제·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VII 검사 및 대가지급**

### **1. 검 사**

#### **가. 의 의**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담당자 혹은 전문회사가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구조·품질·수량·규격·포장상태 등이 계약내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계약법 제14조).

#### **나. 검사시기**

-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55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위 검사기간 내에 검사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55조제5항).

#### **다. 검사방법**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의한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계약 등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
- 검사결과 계약위반 등 부당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이 계약이행 완료일이 된다(동법시행령 제55조제6항).
- 조사설계용역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조사 설계 대상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했는지의 여부를 함께 조사한다.
-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56조).

#### **라.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금지**

-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된다(동법시행령 제57조).



- 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검사에 있어서 감독을 행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②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등 당해 계약의 이행 후 지체 없이 검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③ 계약금액이 3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및 공사, 계약의 경우
- ④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책임감리는 하여야하는 공사계약
- ⑤ 기성급 지급을 위하여 30일마다 행하는 기성검사의 경우(이 경우에는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함)(동법시행령 제55조제7항)

## 2. 대가지급

### 가.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 (1) 의 의

- 공하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급기한(동법시행령 제58조제3항·제4항)

- 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 위 부분 급의 지급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되 검사완료일 이후에 청구한 때에는 청구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3) 검 사

- 중소기업체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대가 지급시 검사는 감독관의 검사로 갈음(다만, 기성검사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실시)할 수 있다.

### 나. 준공금 또는 완성금의 지급

#### (1) 지급기간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

- 지급기간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에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불가항력의 사유로 기한 내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항).
-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고, 반송 일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위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58조제5항).

## (2) 대가지급의 지연이자

- 기한 내에 기성급과 완성급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59조).
- 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대가지급의 지연이자는 지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3항).

## (3) 검사전 대가의 지급

- 국고의 부담이 되는 정부계약에 있어서 대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 계약상대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인 경우와 당해 기관의 소속기관·자회사·출자회사인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회계규칙).

## (4) 계약대가의 양도가능성(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조제1항·제2항)

- 계약상대방은 공사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이행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적정한 공사이행 목적 등 필요할 경우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다. 선금의 지급(국고금관리법 2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선금의 지급등)

## (1) 의 의

- 선금지급이란 계약이행 전 또는 지급시기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선금은 국고손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채권확보, 선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선금정산, 선금회수, 기타사항을 선금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여야 한다(착수계 등의 제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않은 경우

**(3) 선금지급의 범위**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계약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은 상대방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별 의무적 선금 지급률 】

의무 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및 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 20억원	10억원 ~ 3억원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4)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자금배정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상당기간 이행착수 지연이 명백한 경우, 선금지급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

**(5) 기성급과 선금**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부분금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인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선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정산하여야 하며, 선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을 때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회계통칙, 회제125-59).

\* 선금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계약금액)

#### (6) 대가의 선납(국가계약법 제16조)

- 재산의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3.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 가. 의 의

-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써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

#### 나.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 (1) 하자담보 책임기간(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시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의 공종구분에 따라 1년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0조 별표1).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되, 연차별로 하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및 단순암반 절취공사, 모래·자갈 채취공사,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공사 등 하자보수가 필요 없는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2조제2항).

##### (2) 하자검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71조)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전문적인 지식 등이 필요하거나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시설물 공사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하자검사를 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확인서 발급 일 부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소멸한다(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다. 하자보수보증금

### (1)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 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2%이상 10%이하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1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공종별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보증기간 (동법시행규칙 제72조)】

공 종 별	보증금율(%)	보증기간
• 철도·댐·터널·철강교·발전설비 등 조물 및 조경공사	5	최장 10년, 최단 1년 (6단계)
• 공항·항만·석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4	
• 관개수로·도로·매립·상하수도관로·일반건축 등 공사	3	
• 기타공사	2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 보수 보증금은 계약서에 약정사항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과 같이 현금과 각종 보증서로 납부 받는다(동법시행령 제62조제2항·제5항).

### (2) 하자보수 보증금의 면제

- 계약상대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거나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기관 또는, 각종 협동조합인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62조 제4항).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조경공사를 제외한다. 규칙 제72조2항)

### (3)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국고귀속

-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동법시행령 제62조제5항).

### (4)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 및 직접사용

-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1항).
- 당해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보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8조제3항).
- 하자보수 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처리한다(동법시행령 제63조제1항).
- 계약담당자가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또는 유가증권 취급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

## 4. 지체상금

### 가. 의 의

#### (1) 개념

-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6조).

#### (2) 징수요건

- 계약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이 가능하고, 그 이행기간(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한도래를 안 때가 이행 기간임)이 경과하였으며,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4조).

### 나. 지체상금의 징수율 및 징수방법

#### (1) 징수율

- 계약목적물에 따라, 공사(1,000분의 1), 물품의 제조·구매(1,000분의 1.5), 수리·용역·가공·대여 및 기타(1,000분의 2.5),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1,000분의 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000분의 5)으로 한다(동법시행규칙 제75조).

## (2) 지체일수의 계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
- 계약기간 내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원이 검사결과 재시공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재시공 지시일자로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 (3) 징수방법

-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액에 위 징수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지체상금은 해당계약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공사의 대가, 기타 예치금과 순차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제15조제3항).
- 기성(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미인수 관리·사용분 포함)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계산한다(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의 지체된 당해연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회계45101-882.96.4.29).
- 계속비공사의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전체가 완공된 후 준공처리하므로 개별공정별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총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만 부과한다(회계41301-1560. 98.6.19).

## 다. 지체상금의 면제

### (1)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
-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2) 발주기관의 공사중지 명령

- 발주기관이 동절기 등의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그 중지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회계45107-508. 95.4.14).

## 라. 지체상금과 계약기간의 연장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유발생시 수정공사공정 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하나 국가정책사업(국가 기간시설, 안보시설, 건설사업 등)이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가. 의 의

-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해당 조합은 물론 그 대표자와 제한사유를 제공한 조합원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동법시행령 제76조제3항내지제5항).

## 나. 제재사유 및 기간

### (1)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가) 필수적 공통 제한사유(제76조제1항)

- 다음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필수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①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자)
  - ②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은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 ③ 공정거래 및 하도급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④ 조사 설계용역 또는 원가계산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설계 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 한 자.
  - ⑤ 안전대책 소홀로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⑥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⑦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 (나) 임의제한 사유(제76조제8항)

- 재제조치를 한 당해기관이외의 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여부를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계약체결 또는 이행에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②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입찰참가 방해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③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④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실시 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다) 기타 입찰참가 제한

-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속공사의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가 수의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관련 경쟁 입찰을 제한한다(동법시행령 제15조).
-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된다(회제125-867.1994.4.11).

### (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제한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 별표2) 소정의 유형별로 최단 1개월 최장 2년 동안 제한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제한기간 동안 그 관서의 모든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및 확인

### (1) 입찰참가 자격제한 통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업체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재기간, 제재사유 등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6조제6항).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의 확인**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관련 면허·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76조제9항, 동법시행규칙 제77조).

## 참고1 계약 의뢰 및 추진절차

### 1.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개요 및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규모에 맞추어 내부 방침을 받음
- 계약방법결정, 계약기간, 계약금액, 예산과목 등 기본적인 계약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2.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작성

- 업체에서 납품할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부내역 작성
- 관련 규정에 맞는 산출내역서 작성(최근 고시금액 확인)
-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고려

### 3.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수의계약시)

- 사업추진기관 선정사유 및 수의계약이 필요한 사유 기재

### 4. 제안요청서 작성(협상에 의한 계약시)

- 추후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가 그대로 계약서에 반영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제안요청서에 세부적인 사항 기재

### 5.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 기안문은 예시를 참고
- 기본계획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는 필수, 계약방법에 따라 수의계약사유서, 제안요청서, 긴급입찰사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6. 계약부서의 자체 계약 심사

- 사안에 따라 2일 ~ 3일 소요
-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 적절성 검토
- 자체 내부심사 후 처리(자체계약 또는 조달청 계약의뢰)

### 7. 계약체결

- 구비서류 :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계약 이행보증증권(5천만원이상, 계약금액의 2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통장 사본, 정부수입인지, 위임장(대표자가 아닐 경우)
-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업체에 안내

## 8. 계약체결 통보

- 계약부서에서 사업부서로 통보

## 9. 검사관 및 감독공무원 지정, 착수계 접수

- 원인행위 등록 요청(디브레인) / 선금청구 여부 확인
  - ※ 선금청구 구비서류 : 선금지급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선금금보증증권,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지급신청각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분할지출요청서(디브레인)
- 계약통보 문서 접수후 즉시 검사관 및 감독공무원 내부지정
- 업체로부터 착수서류 접수(변경된 산출내역서 등 확인)

## 10. 사업추진 감독

- 계약서 및 제출한 착수계 내용에 맞게 추진여부 감독
- 계약기간 내에 지시한 성과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감독

## 11. 성과물납품 및 검사

- 업체에서 성과물을 납품하면서 검사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처리가 되면 대금요청으로 보완을 지시하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됨
- 검사완료 후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 및 검사공무원 확인이 필요

## 12. 대금청구

- 완료통보 및 대가지급의뢰문서, 검사조서, 경비정산조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통장사본, 하자보수이행증권, 지출요청

## 참고2 예산 전용 및 내역변경

○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구 분	목 (23개)	자체전용대상	자체전용제외 (기획재정부 협의)
100 (인건비)	110 (인건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 비목에서 110-02 (기타직보수)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00 (물건비)	210 (운영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타비목에서 230목, 240목, 250-03목 (특정업무경비), 210-12목 (복리후생비)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220 (여비)		
	230 (특수활동비)		
	240 (업무추진비)		
	250 (직무수행경비)		
	260 (연구개발비)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320목, 330목, 340목, 350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 단, 320-03목(연금지급금)은 인건비(110목)로부터의 자체전용 허용, 340-03목(해외자본이전)은 자체전용 허용
	320 (민간이전)	*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 (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330 (자치단체이전)		
	340 (해외이전)		
	350 (출연금)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410목, 420-03목 (시설비), 420-04목 (감리비)로의 자체전용은 현행 총사업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 420-01목 (기본조사설계비), 420-02목 (실시설계비), 420-05목 (시설부대비)는 자체전용에서 제외
	420 (건설비)		
	430 (유형자산)		
	440 (무형자산)		
	450 (융자금)		
	460 (출자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480 (예탁금)		
500 (상환지출)	510 (상환지출)	상호간 자체전용 가능	* 710-01목 (예비비), 710-02목 (예비금)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700 (예비비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 예산 집행시 내역변경(조정)의 개념 및 변경절차

**내역변경의 개념**

- 내역변경(조정)이란 단위사업내에서 동일목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0\*0(분야) - 0\*\*\*(부문) - \*\*00(프로그램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목)

**내역변경 (조정) 절차**

-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금액변경은 있으나, 단위사업내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예산 변경(전용·이용·이체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다만, 내역변경은 세부사업간 증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전용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여 변경 집행

### 참고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

- 회계관계직원이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 회계관계직원의 의무(동법 제3조)
  -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동법 제4조)
  -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동법 제8조)
  - 회계관계직원의 상급자가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함으로써 그에 따른 회계관계행위로 인하여 변상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급자는 회계관계직원과 연대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 회계관계직원은 상급자로부터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에는 서면이나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그 회계관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자가 다시 그 회계관계직원에게 법령 등에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경우에는 상급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 (의무위반행위)다음에 해당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관계규정 등에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감사원 회칙법 예규)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 그 통제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때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그 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을 참작하여 예정가격 등을 결정하지 아니한 때,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조건, 이행의 난이,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기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와 동종 또는 유사한 거래의 실제가격을 알아보지 아니한 때
  - 다량의 물품을 도매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 소매가격을 조사하거나 공장도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 조달청장에게 구입요청 할 물품을 시중에서 구입한 때
  -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대량구매 등(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을 정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그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납품받은 원가계산서의 내용검토를 소홀히 한 때
  - 여건변동 등 사유가 있음에도 막연히 전회 구입실례만을 답습하여 구입한 때
  - 수입물품 구입 시 수입면장을 제시받을 수 있거나 오퍼가격을 알아볼 수 있음에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하고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 원가계산의 기초가 되는 각종 자료에 관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 상위 없다는 인증이 없음에도 그대로 믿고 원가계산을 한 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잘못된 때
  -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출납한 때
  - 물품의 보관에 따른 시건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때
  - 물품의 출납사무를 정확히 취급하지 아니하여 재고부족이 발생한 때
  - 정당한 수령권자의 확인이 없음에도 물품을 불출한 때



## 2. 계약처리절차 안내 및 참고서식



## 목 차

<b>I. 계약처리절차</b> .....	87
1. 업무 흐름도 .....	87
2. 단계별 주요 설명내용 .....	88
3. 기타 관련사항 .....	92
<b>II. 참고 자료 및 서식</b> .....	93
1. 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및 여비, 경비항목별 기준단가 .....	93
2. 소프트웨어사업비 (유지보수) 산정 참고자료 .....	94
3. 엔지니어링사업비 산정 참고자료 .....	96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율 (사업비 산출시) .....	97
5. 부가가치세 .....	98
<b>III 참고서식 (예시)</b> .....	99
1. 승낙사항 .....	99
2. 계약체결 요청 기안문 .....	100
3. 선금지급 요청 기안문(업체) .....	101
4. 선금지급 의뢰 기안문(감독부서) .....	102
5. 준공검사 요청 기안문(업체) .....	103
6. 준공대금 요청 기안문(업체) .....	104
7. 준공금 지급 요청 기안문(감독부서) .....	105
8. 선금 보증금 이행각서 .....	106
9.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	107
10. 변경계약 합의서 .....	108
11.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109
12. 용역완료 검사조서 .....	110

13. 경비부문 정산조서 .....	111
14. 선금사용 내역서 .....	112
15. 사용인감계 .....	113
16. 납품 및 검사조서 .....	114
17.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115
18. 지출 요청시 구비서류 .....	116
19. 선금 지급시 구비서류 .....	117
20. 선금의 사용계획(내역)서 (예시) .....	117
21. 선금지급 요건 .....	118
22. 용역기관 선정 사유서 .....	119
23.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120
24. 과업지시서 작성 (예시) .....	121
25. 참여연구원 프로필 및 용역수행 현황 .....	122
26.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예시) .....	123

## 1. 업무 흐름도

【계약 의뢰 전】 사업부서	【계약체결】 계약부서	【사업진행, 완료】 사업부서	【대금지급】 사업, 회계부서
1. 예산확보 및 배정 2. 사업계획서작성 - 계약방법, 기간, 과업내용서 작성, 원가계산, 예산 집행과목 등 확인 - 수의계약시 : 수의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 사유 제시, 업체의 참가 자격 확인 - 필요시 계약 조건 및 제안서 작성 (경쟁입찰) 3. 정책연구용역 심의회 개최 ※ 해당시 4. 일상감사실시 ※ 8천만원이상 공사, 5천만원이상 물품 구매·제조, 용역	5. 예산과목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6.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확인 (예정가격작성) 7. 계약구비서류 징구 8. 계약체결 및 통보 9. 지출요청원인행위 (사업부서)	10. 감독 및 검사 담당자 임명 11. 사업 착수계 접수 및 과업내용 지시 12. 선금지급의뢰 ※ 필요시 13. 계약연장요청 ※ 필요시 14. 사업결과확인 15. 검사 및 경비 정산결과 통보	16. 대금지급 - 지출요청원인행위 (기 제출시 불필요) - 하자보수보증증권 ※ 필요시 - (세금) 계산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2. 단계별 주요 설명내용

### 가. 계약 의뢰 전 (사업부서)

항 목	설 명 내 용	비 고
1. 예산확보 및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예산 반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상의 예산금액 및 내역 확인</li> <li>당초 예산 미반영 사업 추진시 사업 필요성 등 제시 (예, 예산내역 변경 사유서 등)</li> </ul> </li> <li>※ 원칙적으로 사업의 낙찰차액 사용 불가</li> <li>예산과목 확인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내용이 예산과목과 다른 경우 예산 이·전용 등 필요한 조치 후 시행</li> </ul> </li> </ul>	
2. 사업계획서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필요성 등 사업타당성 제시</li> <li>계약방법 (수의, 경쟁) 및 기간, 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근거 및 사유서 제시</li> <li>과업내용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추진시 업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목적, 연구과제, 연구방법, 보안, 결과물 제출, 수행 일정, 준수사항 등)</li> </ul> </li> <li>사업비 산출 내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계상 및 적정여부</li> <li>※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율, 부가가치세 불입참조</li> </ul> </li> <li>인건비 기준단가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연구용역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참고</li> <li>전산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등 참고</li> <li>연구원의 자격조건 및 업무, 연구원 용역참여율, 소요기간 (월수) 적정 산출여부</li> </ul> </li> <li>일반 (제한, 지명)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제안서 작성 (특수기술, 공법, 자격증 보유여부, 입찰참가자격조건, 인적·물적 규모 등)</li> <li>필요시 계약 조건 제시</li> </ul>	<p>※ 원가계산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검사·경비 정산 조서 작성 예시 불입 참조</p> <p>※ 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SW 기술자 노임단가, 여비 불입 참조</p>
3. 정책연구 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사업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1천만원 초과)</li> <li>심의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외부전문가 과반수) → 정책평가담당관 사전 협의</li> <li>심의회위원회 : 업체선정시 복수의 기관 대상 심의 후 수의 계약요청사유서에 반영</li> </ul>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
4. 일상감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8천만원이상, 물품 구매·제조, 용역 5천만원이상 (담당부서 감사담당관)</li> </ul>	안전행정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 나. 계약체결 (계약담당부서)

항 목	설 명 내 용	비 고
5. 예산과목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령 (규정) 준수 및 예산배정 여부 확인</li> <li>•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일상감사실시 여부 등 확인</li> </ul>	
6.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참조</li> <li>•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원가계산, 비교견적, 실거래 (표준) 가격, 전문가가격조사기관 가격 등 확인</li> <li>• 예정가격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가격조사 기관 사단법인 한국원가관리 협회 (<a href="http://www.kcaa.or.kr">http://www.kcaa.or.kr</a>) 참조</li> </ul>
7. 계약구비서류 징구 및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 구비서류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보증금 (보험증권),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사용 인감계 및 인감 도장,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계좌입금 통장 사본, 정부 수입 인지 등</li> </ul> </li> <li>• 업체의 참가자격 확인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 등 사업 내용과 합당한지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인감계 붙임 서식참조</li> </ul>
9. 지출요청원인행위 (사업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요청원인행위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통보 즉시 예산과목, 계약금액 확인 후 디브레인 시스템 지출 ⇒ 요청관리 ⇒ 일반지출 ⇒ 지출요청 (원인행위)</li> </ul> </li> </ul>	

## 다. 사업진행, 완료 (사업부서)

항 목	설 명 내 용	비 고
10. 감독 및 검사 담당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 담당자 임명</li> <li>•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전문 감리기관에 의뢰하여 감독</li> <li>•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계약 이행전반에 대하여 관리</li> </ul>	
11. 사업 착수계 접수 및 과업내용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투입인원 이력서 제출), 용역공정 예정표, 기타 지정한 사항 (주간공정현황)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업체 ⇒ 사업부서)</li> <li>•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착수신고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li> <li>•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li> <li>•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의 인력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용역은 사업의 특성상 항상 유지보수 인력이 대기하고 있어야 하므로 유지보수 규모에 따라 일정한 인력을 투입 시키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 직함.</li> </ul> </li> </ul>

항 목	설 명 내 용	비 고
12. 선금지급의뢰 ※ 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li> <li>- 계약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는 경우</li> </ul> </li> <li>• 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li> <li>•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금 청구서, 선금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선금 보증서 또는 증권이나 선금 보증금 이행 각서, 선금지급 신청 각서, 계좌입금 통장 사본</li> <li>- 공동계약일 경우 구성원에게 직접 선금 지급하도록 계약예규가 개정됨('10.1.4)에 따라 구성원별 구비서류 징구</li> </ul> </li> </ul> <p>※ 신청방법 : 업체 ⇒ 사업부서(공문) ⇒ 계약부서</p>	<p>○ 관련근거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의 지급 등”」</p> <p>○ 구비서류 불입 서식 참조</p>
13. 계약연장요청 ※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장요청 기간 :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전 문서로 요청</li> <li>•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서에 기재할 사항(연장기간, 계약금액 변동여부, 지체상금 부과여부 등)</li> <li>- 계약연장사유서(구체적으로) 및 업체의 계약기간 연장 동의서 첨부</li> </ul> </li> </ul> <p>※ 지체상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함.</li> <li>-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됨.</li> </ul>	<p>○ 계약예규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19조 참조</p> <p>○ 동의서 서식 불입 참조</p>
14. 사업결과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 과업지시서(설계서), 계약조건, 원가 산출내역서 등 이행여부</li> <li>• 사업결과물 접수 및 최종확인</li> </ul>	
15. 검사 및 경비 정산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 업체에서 사업 완료통보(서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행사항 확인</li> </ul> <p>※ 사업완료 통보 및 준공검사 요청(업체) : 계약기간 만료일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정산 : 원가산출내역 상 기재된 비용에 대하여 업체에서 증빙내역 수령 확인 후 정산(증빙내역 사업부서 보관)</li> </ul> <p>※ 검사 및 경비정산결과 문서로 통보(계약부서)</p>	<p>○ 검사 및 경비 정산조서 서식 “붙임” 참조</p>



## 라. 대금지급 (사업, 회계부서)

항 목	설 명 내 용	비 고
16. 대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검수, 경비정산 등) 후 계약 내용과 이상이 없을 경우 대가 지급</li> <li>• 정산 후 정산금액에 대해 지급</li> <li>• 구비서류(5일 이내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자보수보증금 보험증권(필요시)</li> <li>- (세금) 계산서</li> <li>-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li> <li>- 지출요청원인행위서(기 제출시 불필요)</li> </ul> </li> <li>• 지출요청원인행위 처리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목, 계약금액 확인 후 디브리네이션시스템 지출 ⇒ 요청관리 ⇒ 일반지출 ⇒ 지출요청(원인행위)</li> </ul> </li> </ul>	<p>※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p>

## ❖ 하자보수기간 및 보증금

○ 하자담보 및 무상 A/S 기간은 납품일부터 용역종류별 아래와 같음.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 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 날에 그 기간이 종료됨.

- 일반 정보통신용역 : 1년
-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2~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및 무상 A/S요구를 받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기 간 :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간
- 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제출)

### 3. 기타 관련사항

#### 가. 계약업무 위임전결 규정 (각종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임차·인쇄 등)

- 계약의뢰시 : 담당자 기안, 과·팀장 전결
- 계약의뢰전 기본계획 : 소관부서 자체판단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담당자 기안, 과·팀장, 실·국장, 장·차관 결재  
※ 예산집행시 위임전결규정 (5억원이상 실·국장, 5억원미만 팀·과장)

#### 나. 계약 체결 소요기간

- 자체계약 : 통상 9일(계약의뢰 공문 접수 후 9일 이내)  
※ 계약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수정) 기간 추가
- 조달계약(일반경쟁, 협상) : 통상 30일 ~ 50일(유찰시 기간 연장)

#### 다. 선금지급시 채권확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5조)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Ⅱ

## 참고 자료 및 서식

### 1. 2014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및 여비, 경비항목별 기준단가

등 급	자격 및 역할	월 임 금	비 고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월 3,018,785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월 1,547,342원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월 1,160,546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인건비는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을 만큼 인상됨.
- 상여금은 인건비 기준단가의 연 400%이내 지급 가능
-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국내 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2호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함.

###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 비	식 비
제1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46,000원	20,000원	25,000원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	정 액	30,000원	20,000원	20,000원

※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민간인의 구분은 영 제30조 및 별표 9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 유인물비 :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
-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
-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함
-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 공청회 등 회의장 사용 없이는 계약목적에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
-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기구,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 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 상각할 수 있다.  
 ※ 산출근거 :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2. 소프트웨어사업비(유지보수) 산정 참고자료

### 2013년 SW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단위 : 원)

구 분	2011.9.1 시행	2012.9.1 시행	2013.9.1 시행	전년대비 증가액
기술사	369,995	391,473	398,119	6,646
특급기술자	340,973	349,279	357,171	7,892
고급기술자	251,772	254,917	266,590	11,673
중급기술자	208,943	207,710	219,469	11,759
초급기술자	162,862	172,789	182,194	9,405
고급기능사	138,613	143,185	154,529	11,344
중급기능사	107,288	112,265	126,240	13,975
초급기능사	93,127	107,141	114,675	7,534
자료입력원	76,887	91,294	94,612	3,318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 본 2013년 노임단가는 인원가중평균치임.
- 상기결과는 일급여기준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법정부담금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의 기본급여는 2012년 73,153원, 2013년 76,893원으로 조사됨.
- 2013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0일로 조사됨.
-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12년 대비 평균 5.9% 증가함.

- “소프트웨어사업비”라 함은 소프트웨어개발비,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 시스템 운용 환경구축비, 데이터베이스구축비, 정보전략계획수립비 등을 말함.
- 소프트웨어개발비의 산정은 개발 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과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구분됨.
- ※ 소프트웨어 개발규모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상 코드라인수 방식이 적절한 경우에는 코드라인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 개발 규모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및 이윤의 합으로 산정
- 2010년 2월 26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부칙 제4조(소프트웨어 대가의 기준 재검토)에 의거 2012년 2월 26일 이후 정부산정기준을 폐지되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유지보수의 대가는 유지보수 계약시점에서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까지의 범위 내에서 용역 유지보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
- ※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다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유지보수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

###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 평가표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단 순		보 통		복 잡	
	기준 (년간)	점 수	기준 (년간)	점 수	기준 (년간)	점 수
유지보수 횟수	4회 이하	0	12회 이하	20	12회 초과	35
자료처리 건수	10만 미만	0	10-50만	10	50만 초과	25
타시스템 연계	없음	0	1-2시스템	5	3개 이상	10
실무지식 필요	별도지식 불필요	0	기초지식 이해 필요	5	전문실무 능력 필요	10
분산처리 여부	실시 않음	0	통합하의 분산처리	10	순수분산 처리	20

※ 1.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특성별로 단순, 보통, 복잡성을 판정하여 총점수(TMP)계산

2. 유지보수 난이도 [%] = 10 + 5 × TMP / 100

3. 유지보수 대가 = 유지보수 난이도 [%] ×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가

### 3. 엔지니어링사업비 산정 참고자료

-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발주자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 효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이 경우 노임단가는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따름.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 **직접 경비** : 여비(발주자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함. 단,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함.
- **제 경비** :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동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 ~ 120%로 계산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또한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함.
- **기술료** :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 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함.

#### 4.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율 (사업비 산출시)

업 종	일반관리비율(%)	이윤비율(%)
○ 학술연구용역 (이윤 : 영리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5	10
○ 일반건설공사 (공사원가)		
5억원미만	6	15
5억원 ~ 30억원미만	5.5	15
30억원이상	5	15
○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및 기타공사 (공사원가)		
5천만원미만	6	15
5천만원 ~ 3억원미만	5.5	15
3억원이상	5	15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25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25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2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25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25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12	25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25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25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11	25
○ 시설공사업	6	15

주1)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 근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 5.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15.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18.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
    - 가.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기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용역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③영 제42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에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년 도 : 회 계 : 원 인 행 위 번 호 :  
소 관 : 관 서 :

## 승낙사항

1. 지정기일까지 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 대가의 1천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견본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 위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인 지)  
인지는 뒷면에  
첨부함

계약대상자 : 상 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계좌번호 :



##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000 사업 계약체결 요청

---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0000000사업과 관련 0000000000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계약을 의뢰 합니다.

- 1.계 약 명 : 00000 사업
- 2.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
- 3.계약방법 : 수의계약(경쟁계약, 협상에의한 계약)
- 4.계약상대자 : 0000미디어(수의계약에 한하여 기재)
- 5.계약금액 : 00,000원
- 6.예산과목 : 0\*\*-\*000-\*\*\*\*-\*\*\*-210-01(분야부터 세목까지 모두기재)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제안요청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일 경우)  
3. 산출내역서 1부  
4. 기관선정사유서 또는 수의계약 사유서 1부(수의계약에 한함).    끝.

부서명 기재, 부서장 사인(직인 아님)

---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

전송

/

/ 대국민공개

## 용역업체명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감독부서)  
(경유)

제목        0000 사업 선금지급 요청

---

0000 사업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선금지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계 약 명 : 00000 사업
- 2.계약기간 : 2014년 0월 0일 ~ 2014년 0월 0일
- 3.계약금액 : 00,000원
- 4.선금요청액 : 00,000원(계약금액의 00%)
- 5.지급잔액 : 00,000원

- 붙임 : 1. 선금사용계획서 1부.
2. 선금보증증권 1부.(공공기관은 이행각서)
3.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1부.
4. 세금계산서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끝.

용역업체장 (인)

\* 계약체결시 사용한 인감

---

협조자

시행

전화

접수



##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000 사업 선금지급 의뢰

---

1. 00000000 호와 관련입니다.(업체에서 보낸 문서 대호)
2. 0000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의거 선금지급 요청이 있어 불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계 약 명 : 00000 사업
-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00일
- 다. 계약금액 : 00,000원
- 라. 선금요청액 : 00,000원(계약금액의 00%)
- 마. 지급잔액 : 00,000원

- 불임 : 1. 선금사용계획서 1부.
2. 선금보증증권 1부.(공공기관은 이행각서)
  3.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1부.
  4. 세금계산서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선금지급 청구문서 사본 1부. 끝.

부서명 기재, 부서장 사인(직인 아님)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

전송

/

/ 대국민공개

## 용역업체명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감독부서)

(경유)

제목       0000 사업 준공검사 요청

---

0000 사업 계약과 관련 000사업이 완료 되었기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검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계 약 명 : 00000 사업
- 2.계약기간 : 2014년 0월 0일 ~ 2014년 0월 0일
- 3.계약금액 : 00,000원
- 4.준공검사요청일 : 2014년 0월 0일

붙임 : 1. 납품 성과물

2.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 일체. 끝.

용역업체장 (인)

\* 계약체결시 사용한 인감

---

협조자

시행

접수

전화

## 용역업체명

수신자 안전행정부장관(감독부서)

(경유)

제목 0000 사업 준공대금 요청

---

0000 사업 계약과 관련 000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 되었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준공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명 : 00000 사업
2. 계약기간 : 2014년 0월 0일 ~ 2014년 0월 0일
3. 계약금액 : 00,000원
4. 기지금액 : 00,000원(선금 또는 기성금 지급)
5. 금회청구액(잔액) : 00,000원

- 붙임 : 1.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 이행증권
  3. 경비정산내역(필요시)
  4. 선금사용내역(선금지급시)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끝.

용역업체장 (인)

\* 계약체결시 사용한 인감

---

협조자

시행

접수

전화



##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000 사업 준공금 지급 요청

---

1. 0000호와 관련입니다.(업체 청구문서 대호)

2. 0000 사업이 완료 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준공금 대금 지급 요청이 있어 송부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 약 명 : 00000 사업

나. 계약기간 : 2014년 0월 0일 ~ 2014년 0월 0일

다. 계약금액 : 00,000원

라. 기지급액 : 00,000원(선금 또는 기성금 지급)

마. 금회청구액(잔액) : 00,000원

- 붙임 : 1.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 이행증권  
3. 경비정산조서(필요시)  
4. 선금사용내역서(선금지급시)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6. 사업완료 검사조서  
7. 업체 청구문서 사본. 끝.

부서명 기재, 부서장 사인(직인 아님)

주무관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http://www.mospa.go.kr>

전화

전송

/

/ 대국민공개

## **선금 보증금 이행각서**

(선금보증서 제출을 대체하는 경우에 한함)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선금보증금 :

본인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선금보증금 지급을 면제받고 동 단서규정 및 동 규정 제38조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상기 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귀부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안전행정부 지출관** 귀하



##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1.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의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2항에 해당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제출하겠음
2. 위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 및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기타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의 개시일은 선금일 이전으로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로부터 60일 이상으로 정하겠음
3. 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귀 부의 결정에 따라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연장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4.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하여 동 선금은 본인의 여타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겠음
5. 선금의 사용계획은 별첨과 같으며, 선금 전액 사용시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음  
\*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선금사용명세서를 귀 부에 제출  
(조합이 계약자인 경우 배정업체별 선금사용 계획 및 사용명세서 첨부)
6. 선금을 잔액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음
7. 선금의 정산에 대하여는 귀 부의 결정에 따르겠음
8.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 부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또는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 부의 반환청구(반환금액의 결정, 반환기한의 지정 및 반환조건)에 따르겠음
9.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귀 부에서 본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선금지급 중지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기타 선금지급에 대한 여하한 사항에 대하여도 귀 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르겠음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9조에 따른 선금지급조건과 관련 상기 지급조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자의 주소 :

상            호 :

대            표 :

• •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예시]

- 계 약 명 :
- 계약기간 :
- 계약금액 :
- 계약보증금 :

본인은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을 면제받고 동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기 계약 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귀부에 납부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안전행정부 재무관 귀하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14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안전행정부 재무관 귀하**

## 용역완료 검사조서(예시)

계 약 내 용	계 약 명	
	계약기간	~
	계약금액	금            원정 (₩            )
착 공 일		20   년       월       일
준공검사요청일		20   년       월       일
검 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감독공무원		직명            성명
<p>계약내용과 상이 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공무원 : 부서명       직명       성명       (인)</p>		
<p><b>안전행정부 재무관</b> 귀하</p>		

## 경비부문 정산조서(예시)

1. 계 약 명 :

2. 계약기간 :

3. 용역수행기관명 :

4. 정산내역

- 계약금액(경비부문) : 원
- 정산금액(실 집행액) : 원
- 청 구 액 : 원

구분	당초계약금액(경비부문)		사후정산금액(실제 집행액)		증 감 (차액)
	산출단가	금액(원)	산출단가	금액(원)	
합계		10,330,000		8,409,480	-1,920,520
	소계	6,510,000	소계	3,585,580	
시외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연구원 - (46,000원× 인× 박) + (45,000원× 인× 일) = 원</li> <li>• 연 구 원 - (30,000원× 인× 박) + (40,000원× 인× 일) = 원</li> <li>• 연구보조원 - (30,000원× 인× 박) + (40,000원× 인× 일) = 원</li> </ul>	6,510,000	- 연구진 항공료 등 교통여비 등 : 3,585,580원	3,585,580	-2,924,420
	소계	1,500,000	소계	2,164,800	
유인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보고서 - 10,000원×50부= 500천원</li> <li>• 최종보고서 - 10,000원×50부= 500천원</li> <li>• 요약보고서 - 5,000원×50부= 250천원</li> <li>• 자료 복사비 - 5,000원×50부= 250천원</li> </ul>	1,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보고서 작성 - 2회 = 1,000,000원</li> <li>• 최종 및 요약보고서 작성 - 1회 = 900,000원</li> <li>• 자료 복사비 - 11회 = 237,800원</li> <li>• 책자 구입 - 1회 = 27,000원</li> </ul>	2,164,800	+664,800
전산처리비	• 디스켓, CD 등 구입비용				
	소계	160,000	소계	59,100	
교통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요금 (전화, 팩스, 우편) - 40,000원*4월= 160천원</li> </ul>	1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요금 - 11회 = 59,100원</li> </ul>	59,100	-100,900
	소계	2,160,000	소계	3,459,580	
회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수당 (외부전문가) - 토론발표, 토론수당 : 70,000원×6명×4회=1,680천원</li> <li>- 다과비용 : 20,000원×6명*4회= 480천원</li> </ul>	2,1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수당 - 2명×300천원=600,000원</li> <li>• 연구진 다과비용 - 총20회=2,000,000원</li> </ul>	2,600,000	+440,000

상기와 같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20 . . .

감독공무원 : 직명                      성명                      (인)

## 선금사용 내역서(예시)

1. 계 약 명 :

2. 계약기간 :

3. 용역수행기관명 :

4. 정산내역

○ 선금신청액 : 24,916,826원

○ 선금집행액 : 24,988,226원

구분	선금신청액(A)		선금집행액(B)		증 감 (B-A)
	산출단가	금액(원)	산출단가	금액(원)	
합계		24,916,826		24,988,226	71,400
인건비	소계	23,020,826	소계	23,020,826	0
	- 책임연구원 3,018,785×1인×2월	6,037,570	- 책임연구원 3,018,785×1인×2월	6,037,570	0
	- 연구원 2,314,762×3인×2월	13,888,572	- 연구원 2,314,762×3인×2월	13,888,572	0
	- 연구보조원 1,547,342×1인×2월	3,094,684	- 연구보조원 1,547,342×1인×2월	3,094,684	0
경비	소계	1,896,000	소계	1,967,400	71,400
여비	• 책임연구원 - (46,000원×인×박) + (45,000원×인× 일) = 원		• 책임연구원 - (46,000원×인×박) + (45,000원×인× 일) = 원		
	• 연 구 원 - (30,000원×인×박) + (40,000원×인× 일) = 원	91,000	• 연 구 원 - (30,000원×인×박) + (40,000원×인× 일) = 원	91,000	0
	• 연구보조원 - (30,000원×인×박) + (40,000원×인× 일) = 원	210,000	• 연구보조원 - (30,000원×인×박) + (40,000원×인× 일) = 원	210,000	0
		70,000		70,000	0
유인물비	- 자료복사비	285,000	- 자료복사비	307,500	22,500
	- 중간보고서 인쇄비	200,000	- 중간보고서 인쇄비	260,700	60,700
회의비	- 전문가 수당 100,000*4명	400,000	- 전문가 수당 100,000*4명	400,000	0
교통비	- 시내 20,000*5명*2회*2월	400,000	- 시내 20,000*5명*2회*2월	400,000	0
기타	- 회의다과비 50,000*2회	100,000	- 회의다과비	96,200	△3,800
	- 사무용품비 70,000*2월	140,000	- 사무용품비	132,000	△8,000

상기와 같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감독공무원 : 직명            성명            (인)

## 사용인감계

실제 인감

사용 인감

위 인감을 본 계약 관련, 계약 및 청구 등 일체의 행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안전행정부 재무관 귀하



[illegible]

- 116 -

## 지출(재무관)요청시 구비서류(예시)

### 1. 지출금액에 대해 지출요청서(일반) : 디브레인시스템

－ 지출 ⇒ 요청관리 ⇒ 일반지출 ⇒ 지출요청(원인행위) ⇒ 작성

### 2. 승낙사항

－ 뒷면에 승낙사항 업체 상호 · 대표자 고무인 날인 후, 대표자 도장 날인 및 수입인지 첨부

※ 정부수입인지 : 인지세법에 의거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2만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4만원),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 3. 지급의뢰 (해당 부서에서 공문 또는 청구서) : 증빙내역 첨부

### 4. 세금계산서

### 5. 업체 청구서

### 6. 납품 및 검수조서 : 물품구입비 지출시

### 7. 견적서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9. 통장 사본

### 10.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선금 지급시 구비서류

1. 선금 청구서 (사업체, 사업부서 : 공문으로)

2. 선금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내역서

3. (세금)계산서

4. 선금 보증서 또는 증권이나 선금 보증금 이행 각서

- 금액 :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 기간 :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

※ 선금 보증금 이행 각서로 대체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선금지급조건 동의서

6. 계좌입금 통장 사본

## 선금의 사용계획(내역)서<예시>

구 분 비 목	내 역	선금요청액
합 계		
인건비 소계		
■ 책임연구원	3,018,785원× 인× 월 = 원	
■ 연구원	2,314,762원× 인× 월 = 원	
■ 연구보조원	1,547,342원× 인× 월 = 원	
■ 보조원	1,160,546원× 인× 월 = 원	
기성품 구입비 등		

※ 선금은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 최소한의 필요비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함.

## 선금지급 요건

### ○ 선금지급대상 요건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의 지급 등”)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
- 입찰참가자격제한(부정당업자)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공동계약일 경우 반드시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

### ○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계약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
-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 지급

### ○ 선금지급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율에 해당되는 선금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1. 공사

- |                              |            |
|------------------------------|------------|
|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 100분의 30 |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 100분의 40 |
|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 100분의 50 |

#### 2.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                            |            |
|----------------------------|------------|
|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 100분의 30 |
|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 100분의 40 |
|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 100분의 50 |

#### 3. 수해복구공사

- |                     |            |
|---------------------|------------|
| 가. 계약금액이 20억원미만인 경우 | : 100분의 70 |
|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 | : 100분의 50 |

# 용역기관 선정 사유서

## □ 용역 개요

- 용역명 :
- 용역기간 :
- 계약방법 : 수의 또는 경쟁(협상, 제안)  
※ 수의 계약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0항제0호
- 수행기관 :

## □ 선정기준 (예시)

- 정부용역 수행실적
- 용역과제 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의 확보
- 실제 정책에 반영 가능한 연구 결과 도출 능력
- 사회 공헌도 및 공감대, 이미지 등

## □ 선정사유 (예시)

- ○○연구원은 00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관련분야의 연구수행을 위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 등 여러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많은 용역과제를 수행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 본 용역의 사업취지 및 방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 정책적 합의가 큰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역량 다량 보유
- 그간의 연구실적 검토결과 및 용역수행 성과, 연구 역량 확보 등 선정기준에 적합하여 본 용역을 누구보다 성실히 수행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판단됨.

20 . . .

부서명                  직                  성명                  서명

##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 I. 사업개요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2. 과업명
3. 과업기간, 추진체계 등

### II. 추진계획

1. 기본방향 (목적)
2. 주요 과업내용
3. 참가자격 및 조건

### III. 제안 요구사항

1. 제안내용 (목차)
2. 과업 수행지침
3. 최종결과물 제출
4. 수행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 IV. 제안안내

1. 제안서 작성방법
2. 제안서 제출
3. 제안서 설명회
4. 제안서 평가
5. 사업자 선정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별첨 2] 제안서 양식

[별첨 3] 입찰참가신청서

[별첨 4] 가격제안서

## 과업지시서 작성[예시]

### 1. 과업개요

- 가. 과업명칭 및 목적
- 나. 과업기간
- 다. 참여인원 및 자격조건 등
- 라. 과업내용
  - 연구과제명

### 2. 과업의 상세내용

- 과제별 연구방법, 참고자료(해외사례, 서적등), 용역결과물 활용목적, 보안, 용역수행 보고서(서식) 제출, 용역결과물 제출(책자, CD) 등 제시

### 3. 과업수행일정

-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
  - 실태조사, 의견수렴, 비교분석, 발전방안 개발 등 추진 일정 제시
-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다. 최종보고 : 계약완료 일전까지

### 4. 기타 유의사항

- 가.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등



## 참여연구원 프로필 및 용역수행 현황

성 명			(19    년생)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 (    ) 연구보조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 사	※ 학교 / 전공분야			
	석 사	※ 학교 / 전공분야			
	박 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용역 수행 현황 (최근3년부터 현재까지)					
기 간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계약금액 (백만원)	역 할
시작	끝				
기타 경력(최근 3년)					
기 간		내 용			
시작	끝				

※ 개인별로 작성,

허위 기재가 발견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예시)

□ 계 약 명 : 000000 연구용역

□ 기 간 : ~

□ 계약상대자 :

□ 산출 금액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인건비 (A)		소 계	00000원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연구원 : 3,018,785원× 인× 월 = 원</li> <li>• 연 구 원 : 2,314,762원× 인× 월 = 원</li> <li>• 연구보조원 : 1,547,342원× 인× 월 = 원</li> <li>• 보 조 원 : 1,160,546원× 인× 월 = 원</li> </ul>
경 비 (B)		소 계	00000원
	여 비 (시외여비만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연구원 : (46,000원× 인× 박) + (45,000원× 인× 일) = 원</li> <li>• 연 구 원 : (30,000원× 인× 박) + (40,000원× 인× 일) = 원</li> <li>• 연구보조원 : (30,000원× 인× 박) + (40,000원× 인× 일) = 원</li> </ul> ※ 1) 숙박비, 2) 일비·식비
	유인물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보고서 : 원× 부 = 원</li> <li>• 완료보고서 : 원× 부 = 원</li> </ul>
	전산처리비		
	시약및연구용역 재료비		
	회 의 비		• 자문료 : 원× 인× 회 =
	교통통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료 : 원× 통× 회 = 원</li> <li>• 시내교통비 : 20,000원× 인× 회</li> </ul>
	임 차 료		
소 계 (C) (C=A+B)			
일반관리비 (D) (D=C×5%)			• 5%이하
이 윤 (E)			• 10%이하 (비영리법인인 미계상)
부가가치세 (F)			(C+D+E)의 10% (비영리법인인 미계상)
합 계 (G) (G=C+D+E+F)			• 천원미만 절사

※ 경비는 사후 정산한다. 단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예시)

※ 원가계산 및 정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함.

## 제 2 편 계약 질의응답 모음



# 1. 주요 질문사항 모음



## 목 차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규정에서 수의계약 사유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서, 다른 법령의 범위 안에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131
2. 국립 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 등과 같은 연구기관을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가기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131
3. 개인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	132
4. 수의계약으로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시, 공동수급자 모두가 수의계약 대상 (업체)이어야 하는지 ?	133
5.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133
6.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해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133
7. 산하기관 등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장 명의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집행이 가능한 지 ?	134
8.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경비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	134
9. 학술연구용역에서 산출내역(경비) 비목이 변경될 경우 사후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135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의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	136
11. 세출예산이 여러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한 건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	136
12.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윤 반영 여부 ?	137
13.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있어서 원수급자가 하도급을 줄 있는지 ?	137
14. 계약체결 당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138
15. 낙찰차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139

16. 일반적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차목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적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	139
17. 준공검사도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경과하게 된 경우 지체상금은 ? .....	140
18. 한 번의 계약으로 다년간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 .....	142
19.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기타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방법은 ? .....	142
20.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	143
21. 학술연구용역에서 산출내역(경비)상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 사후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143
22. 조달수수료를 사업관련 예산과목에서 직접 지출해도 되는지 ? .....	143
23. 낙찰차액(사업비 잔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 .....	144
24. 학술연구 용역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	144
25. 위탁사업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행위에 있어서 지출 시기는 ? .....	145
26.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을 신규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 .....	146
27. 발주처가 다수 부처(기관)인 경우에 계약 체결 및 대가지급 방법 ? .....	146
28.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	147
29.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참여율 50% 의미 ? .....	147
30. 책자 발간시 업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해도 되는지 ? .....	148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 규정에서 수의계약 사유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서, 다른 법령의 범위 안에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법률(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계약체결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동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열거규정, 위임명령)
- 훈령, 예규, 지침 등은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발하는 행정명령으로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하위규정에 속하고 법률로써 정할 본질적인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법률내용을 침해하는 또 다른 규정을 정할 수는 없음(국회 입법권 침해 불가)
- 따라서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5호마목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란 법리상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범만을 말하고, 대통령령 또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규정에 그대로 재위임할 수도 없으므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스스로 규정할 수는 없음
- 다만, 입법례가 많지는 않으나 법령에서 특정사항의 경우 구체적 범위를 한정하여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도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령”이란 의미는 결국, 법률 및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를 말하는 것임

## 2

**국립 대학교 부설 “산학협력단” 등과 같은 연구기관을 국가계약 법에 의한 “국가기관 등”으로 볼 수 있는지?**

㉠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음**

- 국가계약법에서는 이를 “국가기관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계약 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 납부의무도 존재함

- 산학협력단 등에 주어지는 고유번호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비영리단체”에 주어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임
- ※ 산학협력단은 고유목적(“산학협력 촉진 등”)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학술연구용역”이라는 산학협력계약 체결 및 이행, 반대급부 수령)이므로 법인세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 3 개인과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 ㉠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계약상대자 부적격)

-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입찰(법제7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령(시행령 제12조 제1항, 시행규칙 제14조~18조)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를 경쟁입찰(수의계약에 준용, 시행령 제32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음
-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이하 시행령 제12조)
  - ※ (예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14조)
- 국가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는 위 각호의 조건(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필요한 경우 보안적합 판정,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4

## 수의계약으로 공동계약을 체결시, 공동수급자 모두가 수의계약 대상 [업체]이어야 하는지?

### ㉠ 수의계약 체결 시 구성원 각자는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해당되어야 함

-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제조·기타의 계약에 있어 발주관서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임(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 이는 업체 상호간에 수급자격 또는 시공능력 등의 보완을 통해, 각 구성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책임의 공유를 통한 계약이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도급금액과 합일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5

##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어지거나 지체상금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면책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님

## 6

##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해마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매 회계연도마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장기계속계약은 설계 등에 의해 내용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 다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이행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7

### 산하기관 등과 업무위탁 협약을 체결할 경우 기관장 명의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접집행이 가능한 지?

#### ㉠ 업무위탁이라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계약)가 수반되는 행위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수 하여야 함 (재무관이 협약체결, 원칙적 일반경쟁입찰)

- 협약 등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무관의 원인행위(계약)가 있어야 하며 「국가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한 경우 (다른 법령 포함)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업무범위 내에서 지출행위를 수반 할 때에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함
  - ※ 동의서, 각서, 협약·협정서 등은 그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의 반대되는 의사”라는 점에서 계약의 일종에 해당

## 8

###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경비사후정산을 해야 하는지?

#### ㉠ 확정계약의 원칙상 경비부문에 대한 사후정산은 바람직하지 않음. 불가피한 경우 계약 조건에 사전반영하고 사후정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의무만을 부담 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국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학술연구용역 또한 원가계산 시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확정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예정가격 작성기준)
- 다만,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경비)에 의하면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경비비목과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 경비한도에 대해서는 요율로 정하지는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요율한도가 아닌 필요성이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경비에 대한 원가산정(책임)을 다 하는 것이고, 단지 이것만을 이유로 (경비의 대충만을 정하고) 사후정산 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임
- 설령, 양 당사자의 합의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어 경비 사후정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가 발생비용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정산반납 의무만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 되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계약이행이 완료된 이상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이행 도중 경비비목 집행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ex, 계상된 여비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또는 사전에 계상되지 않았던 전산처리비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비목 변경이나 금액 등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국가계약법상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인 경우에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개산계약이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경우도 계약대상이 개발시제품이나 특수품 등과 같은 경우로서 사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며, 사전에 정산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게 하는 이외에도,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사전 감사원 통지 및 정산시 별도로 중앙관서 장의 승인 까지 받도록 하고 있음

9

## **학술연구용역에서 산출내역(경비) 비목이 변경될 경우 사후정산 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ㄱ 산출내역은 계약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산출내역(경비) 비목인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될 시는 미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하여야 함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 등에 의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지?**

㉢ **고유번호증으로 입찰참가 등록이나 계약이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입찰참가등록을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68조 ·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음

11

**세출예산이 여러 과목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한 건의 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 **세부사업이 동일하다면 목을 달리하더라도 집행이 가능**

- 세출예산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부기된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세출예산은 코드체제는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목-세목으로 되어 있으며, 코드체제에 따르면 프로그램 단위로 각 실 · 국별 사용한도금액이 정해지면 각 부처자율로 단위 및 세부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별 최소관리 성격을 띠는 세부사업(기존의 세세항)이 동일하다면 목을 달리하더라도 집행이 가능
- ※ 2007년도 통합재정정보체계 구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전 세출예산 분류체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코드체계 이었음

㉠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는 이윤 반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이상 원칙적으로 모두 납부 의무가 있으나 면세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을 참조

㉡ 산학협력단의 경우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반영(이윤은 미반영)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서는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 동법시행령 제45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범위에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을 포함하고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등을 참조

㉠ 하도급을 주어서는 본래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자격자를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함

-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민법 제664조)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인과 제3자간에 별도의 약정에 의해 수급인이 맡은 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제3자가 하도급인으로서 맡는 것이 하도급 계약임
- 도급인과 하도급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 민간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정부계약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는 별도의 규정임

정부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 관련 규정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부대입찰제”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으나 이는 모두 공사에 관한 규정이고 학술연구용역계약 등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학술연구용역은 연구단체 또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 등의 일종의 “신뢰받은 지식(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성격상 하도급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굳이 여러 분야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면 공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해당 자격자를 연구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계약과 하도급 계약의 차이점】

- 공동계약은 수급인 모두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위치에 있으나, 하도급계약에서는 원수급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 해당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발주관서와에 대하여 수평적 관계에 있으나 하도급계약에서 제3자는 수급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함
  - 공동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공동이행방식은 연대책임, 분담이행방식은 각자 책임)
  - 단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준공 이행의무 부담을 부담하나, 하도급에서는 원수급자가 전적인 준공이행 의무부담
- 공동도급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정해져 있으나, 하도급은 계약체결 후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하수급자가 정해짐

14

### 계약체결 당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 ㉠ 계약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선금지급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 및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 그리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제156호 2014.1.10)에 규정되어 있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35조에 의하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급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금지급 관련 규정은 계약상대자(채권자 등)에게 계약완료 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공무원에게는 선금지급에 따른 의무이행을 확보하도록 책임을 부과한 단속규정이므로 설령, 계약체결시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에 계약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채권확보조치 등의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고 선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5 낙찰차액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낙찰차액이란 입찰 등을 실시하여 집행할 금액이 결정된 후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세출예산에서 정한, 즉 세출예산에 부기된 목적과 내용에 따라 집행할 총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록 사업의 일부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결국, 낙찰차액의 발생여부는 세출예산에 부기된 목적과 내용에 따른 경비(사업)집행이 종료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고 경비(사업)일부의 집행이나 입찰 또는 낙찰의 횟수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임
- 참고로, 낙찰차액의 신규사업 등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지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16 일반적 학술연구용역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 차목[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적용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 ㄱ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법제7조)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시행령제26조)
- 따라서 소액수의계약 건이 아님에도, 막연히 A산학협력단(또는 학회) 등이 B산학협력단(또는 학회)보다 능력이 우수하다거나 또는 관련 선행연구 실적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A산학협력단(또는 학회)을 특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됨
- 예) 추정가격이 1억원인 “지방세수의 확대방안”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A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거로 동 조항을 적용한 경우

-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학술관련 학회나 대학부설 산학협력단 또는 자격있는 개인)는 모두 동일한 용역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려면 연구분야 등이 특수해서 특정인이 아니면 진정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할 것임

## 17 준공검사도중 계약기간 만료일을 경과하게 된 경우 지체상금은?

### ㉠ 준공검사도중 준공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이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실질적인 계약이행은 검사에 합격되어야 완료 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검사에 소요되는 법정기일을 감안하여 그 전에 완료하고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하여야 함. 즉, 계약기간 내에 준공검사까지 필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체결시 법정 준공검사 소요일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계약공무원(감독공무원)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함.
- 계약기간 내 준공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준공검사 도중 계약기간이 경과된 경우
  -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보완지시를 한 경우에는 준공기한(계약종료일) 익일부터가 아닌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하여야 함 (회계 45101-373, '94.3.29)
- 계약기간이 지나서 준공검사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지체상금 부담의무가 있음.(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기간에 대한 이익 상실)
- 이와 별도로 계약위반(또는 계약부당)이 발견되어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그 시정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정 준공검사기간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진행
  - ※ 계약이행 위반(부당)은 보완이 아닌 시정조치(또는 계약해제)사항으로 처음부터 위법사항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간이익 상실

### ♣ 지체상금 부과와 적절여부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행을 완료한 것에 대하여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고 지체상금 부과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

- A(중앙부처)는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4일전에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았음

A는 계약이행 완료통지를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난 후에 B사에 대해 공사의 부실을 이유로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B사는 A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A의 요구내용대로 30일 만에 이를 시정하였다. A는 시정조치일로부터 정확히 10일 후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

이 경우 A가 B사의 계약이행 지체와 계약이행의 부실을 이유로 들어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준공검사일까지 소요된 총 70일간의 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고 계약보증금까지 국고귀속 시킨 조치가 합당한 것인지의 여부?

➡ 결론적으로 이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

□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B사가 계약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이행을 완료한 이상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없고,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또한, B사가 A의 요구내용대로 계약이행 부실부분을 시정한 이상 그 부실부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 사유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행위를 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 조항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임

□ 아울러 계약이행 부실의 책임은 B사에 있으므로 B사가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간도 포함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음 다만 A가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계약기간 종료 후 30일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A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B사는 이 기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으므로 총 70일의 기간중 A가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기간인 30일은 지체상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음.

## 18 한 번의 계약으로 다년간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지?

### ㉢ 유지시킬 수 없음

- 계속비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한 번의 계약으로 다년간 효력을 유지시키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음
- 실무상 전산·정보·통신시설 등과 같은 주요시설의 유지보수 시, 예산 배정의 지연이나 계약담당자의 과실에 의한 업무지체 등으로 유지보수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약특수조건에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예시)”와 같은 조항을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한시적 규정”으로 엄격히 해석한다는 전제하에 반영하여야 함.
- 자동연장 조항이 당사자간 계약효력을 지속시켜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 법령의 단속규정을 위반한 계약담당자의 징계·문책 등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19 학술연구용역 이외의 기타용역에 대한 원가계산 방법은?

### ㉢ 다른 법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의해서 산정

- 원가계산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규정되어 있음
- 기타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원가계산기준이 없는 기타의 용역에 대하여는 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음

## 20 합의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시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계약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없어지거나 지체상금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담당자에게 면책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님

## 21 학술연구용역에서 산출내역(경비)상 구성항목이 변경될 경우 사후 정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산출내역은 계약서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산출내역(경비) 구성항목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될 시는 미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득이 “경비사후정산제”를 적용하는 경우 경비항목은 그대로 있고, 경비총액 범위 내 소요금액 간 일부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산시에 반영할 수도 있음(재량)
- 이는 경비총액을 초과한 정산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대신, 항목 내 비용지출에 융통성을 허용해 줌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재량)

## 22 조달수수료를 사업관련 예산과목에서 직접 지출해도 되는지?

㉾ 일반수용비(210-01)와 “사업관련 예산과목”에서 지출 가능

-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세출과목 구분에서 210(공공요금, 제세 등), 260(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420(법정경비, 공사계약 수수료), 430(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23 낙찰차액(사업비 잔액)을 사용해도 되는지?

### ㉢ 예산에 부기된 목적과 내용에 맞는 범위내에서 가능

- 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의 사용에 관해서는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바, 예외적으로 “정보화예산”은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보화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의 전용은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되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시설비(420목)”는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고,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 하되, 총사업비 범위안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계약금액 변동, 관급자재비 변동, 법정경비, 안전시설물 설치, 현장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등과 같은 몇 가지 예외적인 사유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내역통보) 또한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음

## 24 학술연구 용역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 ㉢ 지급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용역 자체는 그 연구단체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기능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회의 참석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통상적 수당의 범위를 넘어선 고액의 자문료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중복계상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참고)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4)에 자문료 비목은 없음

## 25 위탁사업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행위에 있어서 지출 시기는?

ㄱ 선급과 개산급(예외적 적용)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 및 청구 후에 지출 하여야 함.  
위탁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재무관의 계약은 사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지출관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관이 「세출예산, 계속비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확정채무의 발생과 그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하는 것으로(국고금관리법),
- 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에서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 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토,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보조금, 위탁사업비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국고금관리법령에서는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법령에 의해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사무 등을 위탁하는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경비를 미리 일괄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개산급)확정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과는 달리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개략 계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정산

※ 미리 또는 개산 지급할 수 있는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 아래의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 (국고금관리법 제26조)

1.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이하 동법시행령 제40조(선급), 제41조(개산급))
2. 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선급)
3.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선급, 개산급)
4.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조와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용역에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선급)
5.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선급, 개산급)
6.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선급, 개산급)
7.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개산급)  
(이하 동법시행규칙 제72조)
8.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개산급)

###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 제20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당해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중단할 수 없는” 계속 되어온 계약으로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올해 확정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우리부의 경우, 전산시설(장비) 유지보수 등과 같이 계약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 새 회계연도 예산 지연성립 및 계약체결 지연 등에 대비하고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를 막고 있음
- 또한, 회계연도 시작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중요사업 등에는 비록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배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정책변경이나 예산상의 사유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체결이 안될 시 손해배상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을 부기하고 계약절차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진행

- 발주부처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방법, 분담금 등 세부사항에 대한 해당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각 부처(기관)에서 해당분야별 검사를 실시하고 각자 대가지급



## 28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기성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술연구용역에는 기성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됨(선금지급)

- 공사 등에 있어서는 사업이 도중에 중단된다 하더라도 잔존가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공사 잔존물을 활용해서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으나
-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는 연구기관의 방침이나 연구원 지식·역량 등에 따라 연구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연구기관 등이 바뀔 경우 처음부터 다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존 잔존가치를 인정하기가 곤란함, 학술연구용역은 선금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임

## 29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에서 참여율 50% 의미?

### ㉢ 참여율은 과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연구원들은 대학출강 또는 복수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1개 연구과제에 대한 참여기준을 50%(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가감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되며 다만, 긴급히 진행되는 연구용역 등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임
- ※ 대학교수의 경우는 교원인사기준에 의거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함
  -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중 최소 9시간 이상은 강의로 제외(강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별도)되므로 인건비 기준단가의 최대단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 (참고)참여율 70%인 경우 인건비 계산: 2,314,762원(연구원 단가)×1인×70/50 = 3,240,666원

㉠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야 함
- 국가기관에서 책자 등을 발간하는 경우에 특정업체에 대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별도의 근거가 없는 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업무집행에 다툼을 불러 올 수 있음
- 특히, 국가기관 이름으로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면서 책자나 팜플릿 등을 발간하는 경우에 특정업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그 특정업체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고, 광고내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다툼 발생 시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그 특정업체나 광고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국가기관(공무원)이 담보할 수도 없으므로 신중하여야 함
- 또한, 홍보성 광고를 게재하고 관계자간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책자나 팜플릿 비용 등을 전가하게 하는 행위는 금품수수와 관련된 형사적 문제까지 거론될 수도 있음을 유의

## 2.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



## 목 차

1. 사무용품 조달구매업무 부당처리 .....	153
2. 페트병 원료 구매 관련 예정가격 결정업무 부당처리 .....	153
3. 냉동·공조기 구매 및 설치를 위한 원가계산업무 부당처리 .....	153
4.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정 .....	154
5.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방법 부적정 .....	154
6. 분할발주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54
7. 계약보증금 귀속업무 처리 부적정 .....	155
8. 계약금액 부당변경 .....	155
9. 계약기간 부당 연장 및 지체상금 미징수 .....	155



## 1. 사무용품 조달구매업무 부당처리

- 조달청에서는 사무용품 공급업자와 품목별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고시하여 조달물품 수요기관이 위 조달청 홈페이지 또는 조달EDI를 통해 계약단가의 5% 또는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수요기관에서 전자복사용지 등 사무용품을 개별공급업자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입함으로써 조달할인단가에 비해 비싸게 구입,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어 감사에 지적된 사례

## 2. 페트병 원료 구매 관련 예정가격 결정업무 부당처리

- 00지방공사에서 1999. 12월부터 2001. 3월까지 (주)00와 페트병 원료칩 구매계약 (금액 10,274,000천원)업무를 하면서  
위 페트병 원료칩의 판매업체가 이미 국내에도 8개나 있어 적정거래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경쟁계약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도  
위 기관에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도 않고 위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받아 이를 예정가격의 기초금액으로 삼아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한 결과,  
1999. 12월부터 2001. 3월까지 거래실례가격 9,654,100천원보다 합계 619,900천원 만큼 고가로 구매, 특정 납품업체에 특혜를 부여, 지적된 사례

## 3. 냉동·공조기 구매 및 설치를 위한 원가계산업무 부당처리

- 00본부에서 1999. 9월 냉동·공조기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업무를 처리하면서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위 기관에서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합계 135,991,000원을 따로 계상하여 동액 만큼 예정가격이 과다 결정되어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지적된 사례

#### 4.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정

- 지방공사 00의료원이 2000. 12월 나선형 전산용 컴퓨터촬영기 1대 구매계약을 00(주)와 체결(계약금액 972,000천원)하고 이를 납품 받으면서 위 의료원 회계규정에 따르면 **입찰자격 제한을 특정회사의 특정 품목으로 한정하여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2000. 9월 개최한 장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중을 일본 도시바사의 제품인 X-Vision / GX로 결정하여 다른 업체들의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같은 해 12월 실시한 입찰에서 위 도시바사의 장비를 독점공급하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 위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구매한 결과 초래

#### 5.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방법 부적정

- 00군에서 '00.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소규모시설공사 18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및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며 견적서 제출대상을 한정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 업체에 견적서 제출요청 공문을 팩스로 발송한 것처럼 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실제로는 임의선정한 2-3개 특정업체에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수의계약을 희망하는 다른 업체의 참여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초래

#### 6. 분할발주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00군에서 5년에 걸쳐 총사업비 49억 3,500만원을 들여 추진중인 00수원개발공사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공사는 사업내용이 이미 확정된 사업이므로 구 예산회계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시행함이 타당한데도 3차례에 걸쳐 연도별로 공사량을 분할하여 동일인과 수의계약 체결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사에 지적된 사례



## 7. 계약보증금 귀속업무 처리 부적정

- 00공사에서 1996. 6. 22 김모와 단독택지 1필지에 대한 매도계약(금액 1억 700만원)을 체결하고, 3일 후에 위 김모의 요청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하면서  
확정된 계약을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경우에는 00공사용지규정 제48조 제6항의 규정 및 매매계약서 제14조 제5항의 약정에 따라 수납한 계약보증금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하는데도  
계약체결 후 2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보증금(1,070만원)을 환불하였기  
때문에 같은 금액만큼이 공사수입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지적된 사례

## 8. 계약금액 부당변경

- 00군에서 1999. ××건설(주)와 계약을 맺은 00지구 상수도시설공사(총공사부기  
금액 52억 4,702만원)의 계약변경을 하면서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량의 증감이나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 도서지역 노임할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을 요구한 것은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사항을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여 도서지역 노임할증을 15%  
적용하여 공사비 6억 1,816만원을 부당하게 설계변경 증액, 지적된 사례

## 9. 계약기간 부당 연장 및 지체상금 미징수

- 00조합중앙회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1998. 7월 (사)××전산업협동조합과 '98.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용역계약(계약금액 5억 1,000만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2. 위 시스템을 납품하도록 계약관리를 하면서  
납품기한 이틀전인 같은 해 12. 12. 위 납품자로부터 ① 프로젝트 개발요원 중도  
사퇴에 따른 업무분석 중복시행 ② 업무분석후 예상치 못한 업무범위 확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장사유가 계약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말고 위 성과품을 계약기간 내에 납품토록 한 후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같은 해 12. 11. 연장사유에 대한 검토없이 작업지체가 서로간의 책임있는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작업완료일인 1999. 2. 10까지 지체상금  
2,875만 여원 미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감사에 지적된 사례



### 3. 국가계약법령 유권해석 사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목 차**

### **정부계약제도 관련 법규 해석 사례**

0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161
0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	161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법규 해석 사례**

03. 제안요청설명회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	162
04.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과 협상대상 .....	162
05. 기술평가 이전의 가격입찰 누락 .....	163
06.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	163
07. 입찰공고조건의 변경과 기술협상 .....	164

### **계약관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08. 낙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 .....	165
09. 계약보증과 이행보증 .....	165
10. 단가계약이 총액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	166
1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 여부 .....	166
12. 사고이월 시 선금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	167
13. 대출평균금리 .....	167
14. 직접생산의 확인 .....	168
15. 물품구매계약서 감리·감독 여부 .....	168
16.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병과 .....	169
17.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집행정지의 효력 .....	17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8.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71
19.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	171
20.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	17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1. 물품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	173
22. 승률비용 등의 계약금액 조정 .....	173

####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23.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시 간접비 산정 .....	174
--	-----

#### 공동계약과 하도급

24. 공동도급과 수의계약 .....	175
25.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175
26. 공동계약 유형에의 위배여부 .....	176
27. 발주기관의 승인없는 하도급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177

#### 국제입찰

28. 국내입찰에서 외국업체에 대한 불이익 취급여부 .....	178
29. 국제입찰에서 비협정국 물품납품 가능여부 .....	178
30. 검수 이전 대가지급의 부당성 .....	179

## 정부계약제도 관련 법규 해석 사례

### 0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03.08.20) • • • • •



#### 질 의

재정부, 안행부, 국토부, 조달청 등 관련부처에 질의를 하면 소관부처로 이첩 또는 재질의하도록 하거나 대부분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하는데

#### >> 회 신

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질의답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법령에 대해서만 해석, 소관이 아닌 법령은 소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동 기관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할 수 밖에 없으며, 질의내용이 법규해석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 0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08.05.26) • • • • •



####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도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은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도 경쟁입찰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음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관련 법규 해석 사례

### 03. 제안요청설명회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06.12.12) ● ● ● ●



#### 질 의

협상계약시 제안요청설명회에 참가한 자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나 설명회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 처리절차는?

#### >> 회 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는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설명회에 참가한 자가 1인인 경우 사실상 유찰에 해당하게 될 것인 바, 이 경우 입찰절차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적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재공고 후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함.

### 04.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과 협상대상 ('06.08.11) ● ● ● ●



#### 질 의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자의 경우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협상범위 및 절차는?



## >> 회 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적격자에 해당되며,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에 따른 가격 협상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동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임

## 05. 기술평가 이전의 가격입찰 누락('06.04.25) • • • •



### 질 의

협상계약시 입찰자 중 1인이 가격입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술평가 이전에 가격입찰서 누락여부의 확인이 가능한지?

## >> 회 신

협상계약에 있어 입찰자 중 1인이 가격입찰서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입찰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가격 등에 대한 공개 및 평가없이 입찰서의 누락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06.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08.01.29) • • • •



### 질 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의 내용과 제안요청서가 다른 경우 유효성 여부

## >> 회 신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발주처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 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항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임

## 07. 입찰공고조건의 변경과 기술협상('06.12.06) ● ● ● ● ● ●



### 질 의

협상계약의 집행절차(제안서평가 후 가격개봉하여야 하는지) 및 협상1순위업체 선정 후 입찰공고에 게시한 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여 기술협상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 >> 회 신

입찰가격, 입찰참가여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조건을 입찰실시 후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은 협상적격자에서 탈락한 입찰자의 형평성·공정성 문제 및 협상대상자와의 공정한 협상을 저해할 우려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보며, 또한 협상내용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도 부합되지 않음

## 계약관리 관련 법규 해석 사례

### 08. 낙찰금액과 산출내역서의 불일치 ('06.05.26)



#### 질 의

낙찰자의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과 별첨된 상세내역상의 총계금액이 불일치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낙찰자가 제출하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금액조정 및 기성대가지급에서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바, 계약체결 시 낙찰자의 낙찰금액과 그 낙찰금액을 구성하는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내역서 상의 총계금액을 계약금액에 일치하도록 정정이 가능할 것임

### 09. 계약보증과 이행보증 ('12.12.14)



#### 질 의

당해 용역계약이 단순용역이 아닌 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인 성격을 감안하여 계약보증금을 10%가 아닌 15%로 요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회 신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음

## 10. 단가계약이 총액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06.09.27) • • • •



### 질 의

단가계약이 총액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은?

## >> 회 신

물품구매를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을 최대량(15,000개)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후, 계약이행 중 최대량을 초과하여 일시에 100,000개를 납품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가계약이 아닌 총액계약의 성격으로 보아 총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100,000\text{개} \times \text{계약단가} \times 10\%$ )에서 당초 최대량에 대한 계약보증금( $15,000\text{개} \times \text{계약단가} \times 10\%$ )을 감한 금액을 추가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하여야 할 것임

## 11. 물품구매계약에서 선금지급 가능 여부 (’07.02.21) • • • •



### 질 의

실제 계약목적물인 탑승교 설계, 제작, 현장설치 및 시운전까지 하도록 납품범위를 정하고 구매입찰로 발주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제조와 설치까지 포함하는 당해 계약이 선금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 >> 회 신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 계약이지만 입찰참가 시 국내공항 탑승교 제작설치 실적을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 중 상당부분이 물품제조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 확보 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물품제조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함

## 12. 사고이월 시 선금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07.11.29) ● ● ● ●



### 질 의

사고이월 시 선금잔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 >> 회 신

선금을 지급하고 용역이행 중 당해사업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금의 지급목적에 따라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을 위하여 선금을 모두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선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될 것임

## 13. 대출평균금리 ('11.05.18) ● ● ● ●



### 질 의

선금반환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되는 경우에 선금잔액에 대하여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란?

## >> 회 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평균금리를 찾아보시면 1.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의 대출평균금리와 2. 잔액 기준 총 수신금리의 총 대출금리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서의 대출평균금리는 최근의 금리동향을 잘 나타내주며 금융저축을 하거나 일반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취급액 기준 통계를 적용하는 것임

## ● 14. 직접생산의 확인('10.04.24) ● ● ● ●



### 질 의

물품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나 직접 생산확인서를 요구하여 공장 소재지인 ○○시에서 공장의 생산라인을 확인하였으나 확인서를 발부할 법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발부하지 않는데 직접생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인지,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양식이 있는지?

## >> 회 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방법에 대해서 특별한 서식이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직접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당해 법인에 속하고 있는 구성원이 직접생산하는지 등을 발주처가 적절하게 확인방법을 결정하여 적용할 사항임

## ● 15. 물품구매계약서 감리·감독 여부('07.03.21) ● ● ● ●



### 질 의

통신장비, 통신신호 제어기 등 시스템을 설치하고 서로 연계 작동되도록 선로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복합공정으로 구성된 물품계약에서 수요기관이 공정표 준수여부 감독, 하도급업체 및 자재승인 등을 하고자 하나, 계약상대자는 이를 거부하는데?

## >> 회 신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16.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병과('13.01.06)



### 질 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A물품은 납품기한이 지난 2012.12.28에 납품하여 지체상금 3억을 공제하고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2013년 현재 B물품은 더 이상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계약건에 대하여 전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의 10%인 7억원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 >> 회 신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던 중에 발주처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계약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7억을 국고 귀속시키고 지체상금 3억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환불하여야 할 것임

## 17.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집행정지의 효력('12.02.29) ● ● ● ●



### 질 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박도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하여 현재 집행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입찰참여나 계약체결에 제한이 있는지, 또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 중인 건과 관련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여야 하는 법이나 근거가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소제기에 의하여 해당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 한하여 법원 결정문에 의하여 본안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입찰참여나 계약체결에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현재 이행 중에 있는 계약은 해제 또는 해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18. 단가계약에서 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08.07.04) • • • •



#### 질 의

동일한 물품을 총액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대가지급 전에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하여 조정이 가능하나, 단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E/S 조정기준 일 이전에 납품요구하면 계약금조정이 불가한지?

#### >> 회 신

연간단가방식으로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발주처의 납품 요구서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되어야 할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19.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08.10.22) • • • •



#### 질 의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인 품목조정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지수조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을 품목조정으로 하였다면 추후에 편의적으로 조정방식을 지수조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 20. 물가변동 적용대가 수량 산정 ('08.11.12) ● ● ● ●



### 질 의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용역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 >> 회 신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전에 수행하도록 예정되었던 과업이 발주처의 과업수행 유보 등 사유에 의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행하게 된 경우 수행이 지연된 과업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1. 물품계약에서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99.03.16) • • • •



#### 질 의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또는 통보없이 납품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환수가 가능한지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신청을 납품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하였다면 납품 대가 지급 후에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계약금액 조정신청 또는 통보없이 납품대가를 지급하였다면 환수 등의 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 등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

### 22. 승률비용 등의 계약금액 조정 ('99.09.21) • • • •



#### 질 의

발주처의 추가업무 지시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승률비용 등의 조정방법은?

#### >> 회 신

용역계약에서 발주처의 추가 업무지시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는 바, 계약금액(직접인건비) 증감분에 대한 제정비용 등은 내역서상의 율(단, 법정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 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 사유, 산출내역서의 구성 및 대가산정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 23. 계약기간 연장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 시 간접비 산정 (’07.02.08) ● ● ● ●



#### 질 의

간접노무비 산정 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현장인원 및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본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 또는 과업수행 기간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무인원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지?

#### >> 회 신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 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간접노무비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당해 연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간접노무비 산출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 정산서류·임금지급 대장 및 현장확인 북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공동계약과 하도급

### 24. 공동도급과 수의계약('96.04.03) • • • •



질 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도급이 가능한지?

#### >> 회 신

공동도급 계약제도는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을 위한 제도인 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도급한도액 및 면허 등의 보완이 당해공사 시공상 불가피한 경우에 공동도급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임

### 25.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 • • • •



질 의

구성원의 인력배치가 원가투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전면 책임감리용역에서 공동수급체 A(대표사)사의 출자비율 10%, B사의 출자비율 90%일 경우 출자 비율이 적은 A사가 대표사가 될 수 있는지?

#### >> 회 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도록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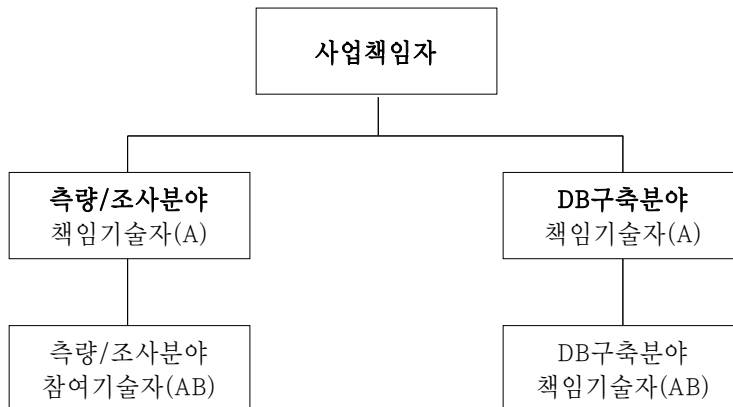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동 구성원간의 협의 하에 선임된 대표자의 출자비율이 타 구성원 보다 많도록 제한하지는 않음

## 26. 공동계약 유형에의 위배여부 ('12.10.18) • • • • •



### 질 의

분담이행방식에서 수행 조직구성이 사업단위 또는 기능단위로 불분명하게 분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2에 위배되는 것인지?



### >> 회 신

수행조직의 구성원사별 구성이 사업단위 또는 기능단위로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법령상 복수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로 다른 업체가 계약내용을 분담하여 이행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수행 조직에 구성원사가 일정 출자비율로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모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면 공동이행방식으로 볼 수 없어 동 예규 제2조의 2에 위배됨

## 27.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08.07.04) ● ● ● ●



### 질 의

위탁업체가 사업수행의 일부 영역 중 Help Desk(전화·게시판 상담 등) 업무를 다른 업체의 인력을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 이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에 관계없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0조(하도급관리 등)에 따라 위탁업체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로 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

### >> 회 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당해계약에 관한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라도 적용되며 또한 계약문서에 하도급 관련 내용의 유무를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에 적용됨

## 국제입찰

### 28. 국내입찰에서 외국업체에 대한 불이익 취급여부 ('11.08.16) ● ● ● ●



#### 질 의

외국기업의 국내입찰 참여시 입찰평가에서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 >> 회 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규정은 국가계약법령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음

### 29. 국제입찰에서 비협정국 물품납품 가능여부 ('07.05.08) ● ● ● ●



#### 질 의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하는 공급 약속서 상의 제조업체가 협정가입국 국민이어야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 >> 회 신

국제입찰에서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토록 하면서 대한민국의 업체에 대하여는 원산지 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무차별 원칙 및 제4조의 원산지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음



## 30. 검수 이전 대가지급의 부당성 ('07.06.27) ● ● ● ● ● ● ●



### 질 의

‘회기 지출가능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물 검수 이전에 대금을 지급한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 조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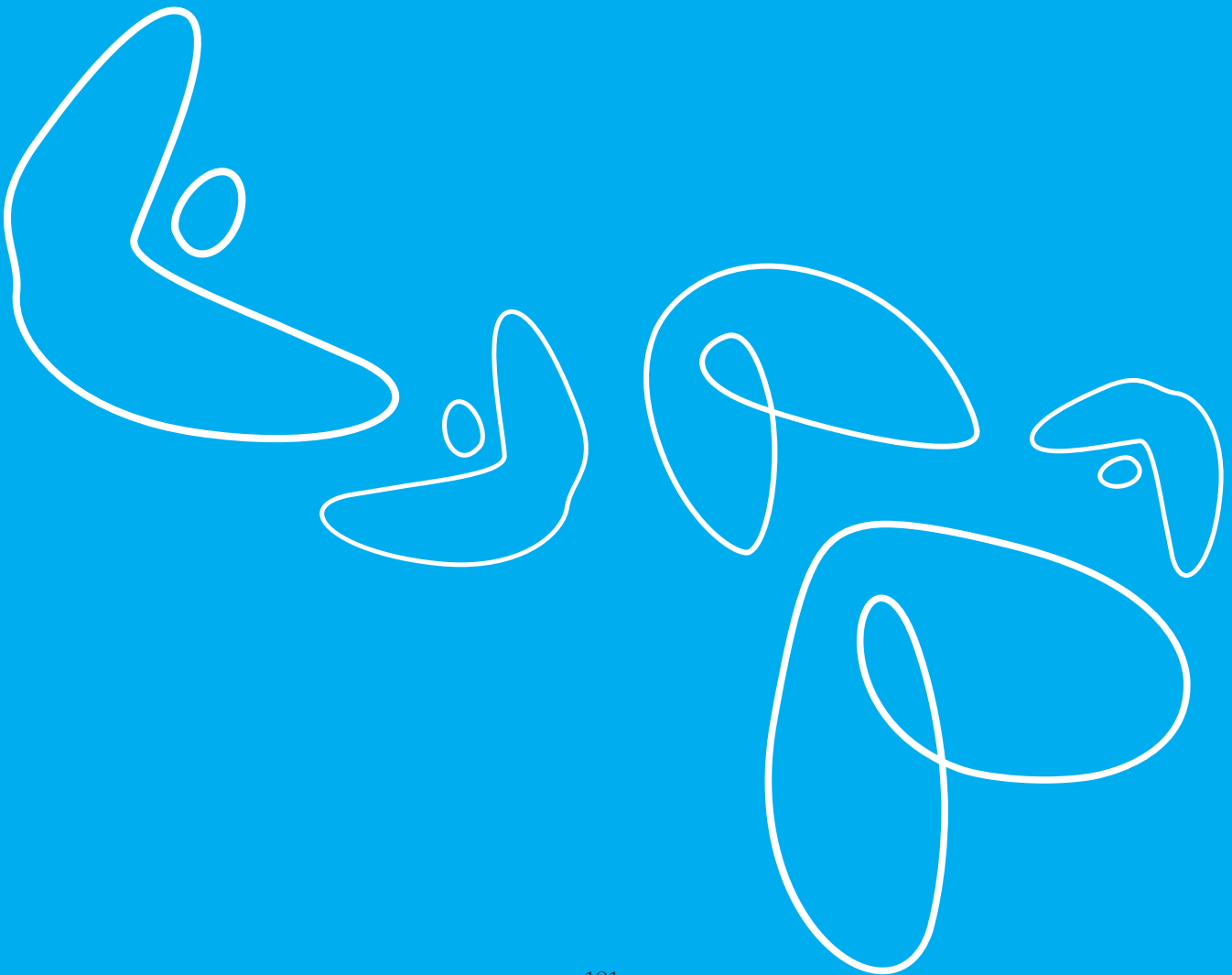
### >> 회 신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가를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회기 지출가능 기간 부족’으로 인한 검사 전 대가지급은 동법 제15조의 단서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제 3 편

# 학술(정책)연구용역 계약매뉴얼





## 목 차

I. 학술 (정책) 연구용역 개요 .....	185
II. 주요계약방법 .....	185
III. 계약흐름도 .....	186
IV. 원가계산 (인건비) .....	187
V. 원가계산 (경비) .....	190
 [참고 1] 계약요청 공문 (일반경쟁) .....	192
[참고 2] 계약요청 공문 (수의계약) .....	193
[참고 3] 학술 (정책)연구용역 산출내역서 (예시) .....	194
[참고 4] 정책소위 결과보고 (예시) .....	195
[참고 5] 수의계약사유서 (예시) .....	196
[참고 6]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예시) .....	197



## I 학술 (정책) 연구용역 개요

### 1. 정의

-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

#### 학술 (정책) 연구용역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 2014년 정책연구 추진계획 (정책평가담당관)
- 일상감사실시지침 (감사담당관)

## II 주요계약방법

### 1.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일반경쟁입찰을 통하여 연구자를 공모한 후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통하여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절차의 투명성 확보**
- 계약 체결까지 평균 50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업무추진 불가

### 2.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계약추진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적용시 5천만원 이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 가능
    - ※ 학술 (정책)연구의 경우 전자입찰대상(동법시행령 30조)이 아님으로 5천만원까지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를 거쳐 **특정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은 가능(계약체결까지 평균 5일 소요)  
하나, 특정업체 선정에 대한 특혜 시비 발생

### Ⅲ 계약흐름도

구분	순서	업무절차	검토사항
사업부서	1	사업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확보 및 예산 과목 확인</li> <li>- 계약방법 결정 (수의계약 or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li> <li>-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작성</li> </ul>
	2	정책연구 심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의 적합성, 결과 활용목적의 명확성, 기본연구과제와의 중복성 등 검토</li> <li>- 수의계약의 경우 연구자 선정</li> <li>- 외부위원의 참여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2개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심의회를 개최하여 업체 선정</li> </ul> </li> </ul>
	3	일상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천만원 이상 용역 ※ 일상감사실시지침</li> </ul>
	4	계약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시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의계약</b> :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수의계약사유서, 정책소위결과보고서</li> <li>• <b>협상에 의한 계약</b> :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긴급입찰사유서(필요시)</li> </ul> </li> <li>※ 5천만원 이상의 계약의 경우 일상감사 의견서 첨부</li> </ul>
계약부서	5	계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목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 검토</li> <li>- 계약방법 확인 및 사업비 예정가격 작성</li> </ul>
	6	계약체결 및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비서류 징구 후 계약서 작성</li> </ul>
사업부서	7	감독 및 검사 공무원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공무원 : 사업전반에 대한 확인</li> <li>- 검사공무원 : 사업종료 후 결과에 대한 확인</li> <li>※ 사업부서에서 내부결재로 지정</li> </ul>
	8	사업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상대자로부터 착수계를 접수·승인 후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서에 따라 용역실시</li> </ul>
	9	선금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체 요청시 선금지급기준에 의거 조건에 적합한 경우 최대 계약금액의 70% 미만까지 지급가능</li> <li>※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6호, 2014.01.10)</li> </ul>
	10	검사 및 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결과 확인</li> </ul>
	11	대가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서, 검사조서, 경비정산조서 등을 구비하여 지급 요청</li> </ul>



## Ⅳ 원가계산 (인건비)

### 1. 개요

#### 가. 인건비 기준단가

등 급	월 임금	역할 및 자격요건	비 고
책 임 연 구 원	월 3,018,785원	용역수행을 지휘·감독 결론 도출 <b>대학 부교수 수준</b>	1인 원칙
연 구 원	월 2,314,762원	책임연구원을 보좌. 실질적인 연구자 <b>대학 조교수 수준</b>	
연 구 보 조 원	월 1,547,342원	통계처리·번역 등 <b>조교 수준</b>	
보 조 원	월 1,160,546원	타자·계산·원고정리 등 단순업무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적용하고,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 나. 인건비 추가단가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적으로 지급가능.
- －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 참여율

- 용역수행 기간 동안 참여연구원의 정상 근무시간 가운데 **당해 용역과제에 투입되는 업무시간 비율**
- － 용역기간 동안 **다른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맡은 과제에만 전념할 경우에 한하여 참여율을 100% 인정할 수 있음**

## 2. 인건비 적용방법

### 가. 참여율 계산방법

- 인건비 기준단가는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으로 책임연구원의 경우 최소 0원(0%)에서 최대 6,037,570원(100%) 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최대금액(100%)을 지급한다는 것은 해당 연구원의 일체의 과업을 하지 않는 경우임
- 예를 들어 대학교수는 교원인사기준에 의거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함. 주당 법적근무시간 40시간 중 최소 9시간 이상은 강의로 제외됨으로 인건비 기준단가의 최대단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 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사례

- 근로기준법에 의거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가격경쟁력 및 기술력으로 낙찰이 되는 국가계약에서 상여금과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인건비에 추가 되는 실제사례는 거의 없음

### 다. 참여율 계산 사례

구 분	소요금액	산출내역	참여율 (실제)
책 임 연 구 원	1,811,271원	3,018,785원×1명×3월×20%	10%
연 구 원	6,944,286원	2,314,762원×2명×3월×50%	25%
연 구 보 조 원	1,392,608원	1,547,342원×1명×3월×30%	15%

## 3. 주의사항

- 사업발주시 사업기간 동안 해당 연구원(개인)의 용역 참여 내역(타부처 포함) 및 과업을 사전에 확인하여 총합이 100%를 넘지 않도록 전체 참여율을 관리

>> 감사지적사례

- 00년 00부에서 00교수에게 발주한 연구용역중 00년0월0일~0월0일 사이에 위 교수에게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중복된 기간인 2개월 동안 참여율을 최고 185%까지 인정하여 예산낭비 및 용역 과제의 품질 저하 초래

용역과제명	계약 시작일	계약 완료일	계약액 (천원)	참여율	인건비 산정식
00운영체계 미래전략 연구용역	7.5	10.4	29,997	30%	2,285,056원×3월×60%
00개방업무 제도개선 연구용역	7.12	11.11	28,827	25%	2,285,056원×4월×50%
00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8.23	11.7	29,500	50%	2,285,056원×2.5월
00단체 지원사업 평가용역	9.4	12.2	57,225	50%	2,980,044원×3월

- 연구용역은 담당공무원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하여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인건비 산정시 실제연구를 진행 하는 연구원(대학 조교수 수준)을 중심으로 원가산정 하여야 함
-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시 연구보조원 위주(3~4명)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실제연구를 연구보조원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원가계산시 주의바람
  - ※ 책임연구원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에 의거 1명이 원칙이고, 연구보조원은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한 1명으로 계약체결하고 있음

## V 원가계산(경비)

### 1. 개요

- 연구용역 경비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에 정해진 비목에 대해서만 실비로 산정
- 경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2. 비목별 계산방법

#### 가. 여비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으로 여비지급하며 관외출장의 경우에만 계상

#### ✦ 외부 민간인에 대한 정액여비 지급기준 ✦

구 분	운 임*	숙박비	일 비	식 비
책임연구원	정 액	46,000원	20,000원	25,000원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정 액	30,000원	20,000원	20,000원

>> (예시) 책임연구원 (46,000원 × 2일) + (45,000원 × 3일) = 227,000원 (운임 별도)  
 연구원 (30,000원 × 2일) + (40,000원 × 3일) = 180,000원 (운임 별도)

\*운임(정액): 구간별 금액= 가장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 (영수증 첨부 안해도 됨)

예) 서울 ↔ 부산 : ktx요금

서울 ↔ 강원도 : 고속버스 요금

#### 나. 유인물비

- 각종 보고서 작성비 등을 인쇄기준 및 시중가격 등을 참고하여 계상
- >> (예시) 최종보고서 20,000원 x 50부 = 1,000,000원

#### 다. 전산처리비

-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의 사용료 및 부대비용

## 라. 시약 및 연구용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마. 회의비

-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 바.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 공청회 등 회의장 사용 없이는 계약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상

➤ (예시) 공청회 회의장 임차 1,000,000원 x 1식 = 1,000,000원

## 사. 교통통신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20,000원), 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 (예시) 시내교통비 20,000원 x 5일 x 5명 = 500,000원

전화비 10,000원 x 3개월 = 30,000원

## 아. 감가상각비

-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 자. 조사비용

-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 차. 일반관리비

- 인건비, 경비의 합계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함.

## 카. 이윤(영리법인인 계약자에 한함)

-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0/0 -

- 192 -

## 참고 2 계약요청 공문(수의계약)



### 안 전 행 정 부

수신자      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계약의뢰

---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용역에 대한 긴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속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계 약 명 :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다. 계약금액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라. 예산과목 : 7000-7032-300-260-00(연구개발비)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바. 계약상대자 : 고려 연구학회

-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 1부.  
5. 정책소위결과보고서 1부. 끝.

**참고 3** 학술(정책)연구용역 산출내역서 (예시)

## 학술연구용역 산출내역서

(단위 : 원)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건비	책 임 연 구 원		인원×기준단가×적용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소 계			
② 경비	여 비		인원×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유 인 물 비		수량×단가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	예정가격 작성기준
	시약 및 연구용 재 료 비		"	"
	회 의 비		인원×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임 차 료		수량×단가	예정가격 작성기준
	교 통 통 신 비		인원×단가	"
	감 가 상 각 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③의 5%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⑤의 10% 이내	예정가격 작성기준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경비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 참고 4 정책소위 결과보고 (예시)

# 정책연구 심의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 개요

- 사 업 명 :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 소요예산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천만원이하의 용역)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2. 4. 24. / 소회의실
- 심의내용 : 정책연구 용역 연구과제 심의 및 연구자 선정
- 소위원회 구성 : 5명 (위원장1, 내부위원2, 외부위원2)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비 고
위원장	김 국 장	안전행정부 1국장	실 또는 국의 장
위 원	정 과 장	안전행정부 1과장	내부 위원
	박 과 장	안전행정부 2과장	"
	오 교 수	한국대학교 교수	외부 위원
	류 교 수	우주대학교 교수	"

## □ 심의결과

구분	연구기관	연구 참여자		결과
1	고려 연구학회	책임연구원	정은택 교수	선 정
2	금관 연구학회	책임연구원	장현서 교수	비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곳 이상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및 수의계약 여부의 적절성 심의결과 고려 연구학회를 적합 연구기관으로 결정

## □ 향후 계획

- 계약의뢰, 계약체결 및 연구용역 추진

## 참고 5 수의계약사유서 (예시)

## 수익계약 요청사유서

① 수의계약 대상업체 현황	② 업 체 명	고려 연구학회
	③ 사업자 등록번호	123-82-123456
④ 대상물품 현황	⑤ 물 품 내 역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⑥ 수의계약 요청근거	⑦ 법 적 근 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⑧ 수의계약 근거	
⑨ 수의계약 요청사유 (업체선정사유)	<p>○ 필수내용</p> <p>① 업체를 선정한 사유 기술</p> <p>② A, B업체를 비교한 결과 A업체가 우수했다는 내용 기술</p> <p style="padding-left: 20p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의 계약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2곳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토록 되어있음</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소속 :                      성명 :   (인)</div>		

## ※ 작성방법

1. 제7호: 국가계약법 수의계약요청 관련규정을 기재
2. 제8호: 수의계약 관련 각종 “권리사항(우선구매대상 인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을 기재
3. 제9호: 사업목적상 당해물품 및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사유를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세부적으로 기재

## 참고 6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예시)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안전행정부 인사제도 연구용역)

#### □ 추진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인 경우

#### □ 추진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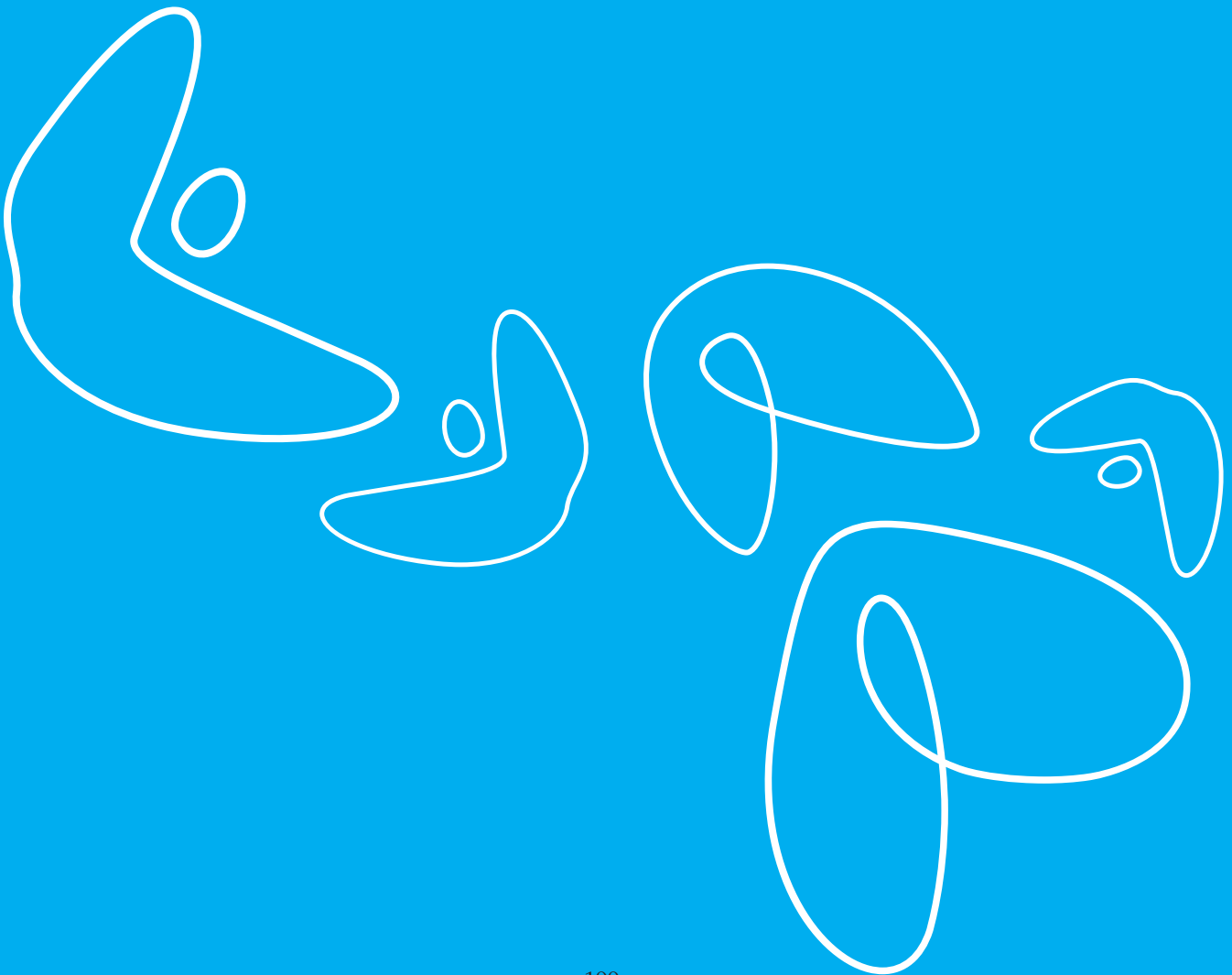
○ 〈긴급입찰을 해야 하는 사유 기술〉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 1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를 요청함



## 제 4 편

# 인쇄물 계약 매뉴얼





## ☞ 목 차

1. 인쇄계약 개요 .....	203
2. 인쇄 용어 설명 .....	205
3. 인쇄기준요금 적용방법 (옵셋인쇄) .....	206
4. 인쇄기준요금 적용방법 (경인쇄) .....	211
5. 견적서 서식 .....	213





# 인쇄물 계약 업무매뉴얼

## 1

## 인쇄계약 개요

### □ 인쇄계약 흐름도



### □ 계약의 종류

종류	특징	소요기간 (평균)
수의계약 (타법령 등)	법령에서 정한 업체와의 계약 <sup>1)</sup> - 국가유공자 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업체 등	자체 : 5일 조달 : 10일
수의계약 (견적)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약식(공고기간 단축 등)으로 2개 이상 견적서 접수 후 업체 선정 가능 <sup>2)</sup> ① 500만원 이하 : 관서(사업부서)에서 지출 ② 500만원~2,000만원 : 운영지원과에서 계약·지출 ③ 2,000만원 초과 :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sup>3)</sup>	자체 : 5일 조달 : 10일
일반경쟁계약 (최저가)	입찰한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와 계약	20일
일반경쟁계약 (협상에의한계약)	기술(80%)+가격(20%)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PT를 통해 업체의 기술력 등을 평가 할 수 있음	50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내지 라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인쇄물 계약절차

### ○ 자체계약절차(500만원 초과 ~ 2,000만원 미만)

- 해당 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또는 생략으로 진행
  - ※ 디자인료 등 최종결과에 반영되기 어려운 작업(기본 단가 초과)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수행 과정에 대한 대가 지급 가능

#### ① 계약서 작성 건

- 계약요청(사업부서) → 계약검토(원가산정 등) → 계약서 작성 → 사업수행 → 검사·검수 → 대가지급

#### ② 계약서 작성 생략 건(승낙사항)

- 인쇄물 사전품의(운영지원과 계약계장 협조결재\*) → 승낙사항 작성(사업부서) → 사업수행 → 대가지급요청 → 대가지급

\* 협조결재시 부서의 법적인무구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승인

※ 대가지급요청시 산출내역에 오류(금액과다 등)가 있는 경우 가격조정 후 지급

### ○ 조달계약절차(2,000만원 초과)

계약요청(사업부서) → 조달계약요청(운영지원과) → 계약검토 및 체결(조달청) → 사업수행 → 검사·검수 → 대가지급

## □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 ① 계약서 작성 건 지출시 구비서류

- 지출요청서(dBrain),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지출요청 공문, 통장사본

#### ② 계약서 작성 생략 건(승낙사항) 지출시 구비서류

- 지출요청서(dBrain), 지출요청 공문, 세금계산서, 검사조서, 승낙사항, 견적서(원가계산서) 및 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사전품의서(운영지원과 협조결재), 수입인지 2만원(1,000만원 초과시)

## □ 인쇄종류

- 오프셋인쇄 : 고급인쇄로 색상의 표현이 다양함. 대량인쇄시 효과적, 기본 1000부의 단가 적용으로 소량 인쇄시 부적합
- 경인쇄(마스타인쇄) : 기본단색인쇄로 소량 인쇄시 효과적  
※ 단색 인쇄의 경우 경인쇄와 오프셋인쇄의 견적을 비교후 저렴한 방식으로 진행

## □ 색도

- 황, 적, 청, 흑 4가지 색으로 모든 색 구현, 사용되는 수량에 따라 결정  
※ 검정만 사용 : 1색도, 검정+파랑 : 2색도, 칼라인쇄 : 4색도

## □ 인쇄용지규격

- 종류 : 4x6판 전지(788×1,091mm), 5x7판 전지(636×939mm)
- 절지 : 전지를 나눈 것, 전지를 16등분하면 16절지

절수	치수	크기(mm)	절수	치수	크기(mm)
전지 (4×6)	26*36	788*1090	10절 (4×6) 국8절 (5×7) A4	7.2*13	218*394
2절 (4×6)	18*26	545*788		7.5*10.5	227*318
4절 (4×6)	13*18	394*545		8*10	242*303
8절 (4×6)B4	9*13	273*394	16절 (4×6)B5	6.5*9	197*273

## □ 일반관리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의거 인쇄는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인정
  - 업체의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분석, 판매비를 제외한 실제로 발생하는 일반관리 비율을 적용

## □ 이윤

- 재료비(용지대 등), 외부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노무비 즉, 조판비, 인쇄비, 제본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 기존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현재는 기준이 없음)을 준용하였으며, 요율 적용율은 우리부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원가산출기준 마련

## □ 용지대

○ 용지의 단가는 물가정보지 등(최저가격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한 후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

$$\text{용지대} = [\text{부수} \times (\text{페이지수} \div 2) \div (\text{절수} \times 500)] \times \text{연당단가} \times (1 + \text{손지율})$$

※ 국전지(5×7)는 물가정보지에 가격이 기재되지 않음으로 4×6전지가격의 69.4%로 환산

### >>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부 까지	9.0%	12.0%	14.0%	17.0%	18.0%	23.0%	23.0%	29.0%
2,000부 까지	8.2%	11.1%	13.0%	16.0%	16.5%	21.5%	21.0%	27.0%
3,000부 까지	7.0%	9.3%	11.0%	14.0%	14.0%	18.5%	17.5%	23.0%
5,000부 까지	5.5%	7.3%	8.4%	10.8%	11.0%	14.5%	13.5%	18.0%
10,000부 까지	3.7%	5.0%	5.7%	7.2%	7.5%	9.9%	9.3%	12.4%
13,000부 까지	3.4%	4.6%	5.2%	6.6%	6.9%	9.0%	8.6%	11.3%
13,000부 초과	2.5%	3.3%	3.8%	4.8%	5.0%	6.5%	6.3%	8.2%

## □ 기획료

○ 시중거래가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가격 산정

- 계약서 작성 건 : 인쇄물 제작과정에 작성되는 여러 시안에 대한 디자인료 및 기획 비용 지급
- 계약서 생략 건(승낙사항)  
: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만 대가지급(중간과정의 산출물에 대한 대가지급 불가)

## □ 조판료

$$\text{조판료} = \text{면수} \times (\text{기준단가} - \text{조판감액})$$

○ 원고를 타자하는 비용, 일반적인 편집비용 및 디자인비용

※ 행정관리담당관-4(2013.3.25)호 “우리부 간행물 표지 표준디자인 수정안 활용 협조요청”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주의

○ 기준단가

구 분	판 형	기준단가
일반책자	4×6배판(16절)	10,050원
	국 배 판(10절)	14,630원
화 보 (3색이상 칼라인쇄)	4×6배판(16절)	25,400원
	국 배 판(10절)	35,700원

- 주) (1) 조판완료 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  
 (2) 슬라이드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증가격을 준용  
 (3)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등은 시증가격을 준용  
 (4)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  
 (5) 조판 및 편집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감액 또는 생략할 수 있다

○ 조판료 감액표

구 분	조판생략 감액 <sup>(1)</sup>	조판생략 감액 <sup>(2)</sup>	조판생략 감액 <sup>(3)</sup>
8 절	8,560원	6,690원	4,420원
10 절	6,780원	5,150원	3,500원
16 절	4,620원	3,470원	2,380원

- 주) (1)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필름출력비(제판료)

○ 원고의 색상을 분해하여 배열하는 과정

$$\text{필름출력비} = \text{기준단가} \times \text{색도} \times \text{인쇄면수}$$

구 분	전지	2절	4절	6절	8절	10절	16절	18절	25절	32절
기준단가 (1도당)	30,050	16,070	8,040	6,020	4,010	2,500	2,010	1,700	1,310	1,000

## □ 인쇄판대(소부비)

○ 종이에 인쇄하기 위한 판

$$\text{인쇄판대} = \text{기준단가} \times \text{색도} \times (\text{전체페이지} \div \text{판당면수})$$

>> 판당면수 : 16절지는 전지를 16등분한 것이다. 즉 전지로 인쇄하면 16절지 16장을 한 번에 인쇄하는 것.  
2절의 경우 전지의 절반

구 분	2절 (4X6판)	전지 (4X6판)	국판전지
P.S 판	12,140	20,890	4X6판 전지의 69.4%

주)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70,000통 이상의 경우 100% 가산

>> 예시) 1판의 구성 (2절의 경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 2절 한 장에는,  
16절 8페이지가 인쇄됨

## □ 옵셋인쇄료(2절단면기준)

○ 종이에 직접 출력하는 비용

$$\text{옵셋인쇄료} = \text{부수} \times \text{기준단가} \times \text{1색도의 판수} \times (1 + \text{가산비율})$$

>> 예시) 1500부, 4색도, 16절, 500p, 100g 아트지인 경우?

$$\Rightarrow 1500\text{부} \times 39.05 \times 63\text{판} \times (1 + 0.3)$$

>> 주의사항 : 인쇄료 가산시 곱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산비율은 더하여야 함

$$\Rightarrow \text{잘못된 계산) } \text{가격} \times 1.3 \times 1.2$$

$$\text{올바른 계산) } \text{가격} \times (1+0.3+0.2)$$

부 수	기준단가 (부당) - 2절 단면 기준, 단위(원)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부 까지	13,28	23,72	34,37	43,46
2,000부 까지	12,03	21,42	30,77	39,05
3,000부 까지	10,71	18,85	26,97	33,85
5,000부 까지	9,30	16,21	22,90	28,74
7,000부 까지	8,67	14,99	20,91	26,29
10,000부 까지	7,84	13,48	18,54	23,37
13,000부 까지	6,52	11,11	14,94	18,89
13,000부 초과	5,17	8,55	11,06	14,29

- 주) (1) 150g/m<sup>2</sup> 이상의 후지 또는 50g/m<sup>2</sup>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펄 (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 70연 이상 100연 미만 (3%), 100연 이상 150연 미만 (5%), 150연 이상 200연 미만 (6%) 200연 이상 (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9) 전지는 2절인쇄의 100% 가산, 4절은 50% 감산한다.

## □ 책자 제본료

- 인쇄된 종이를 책자형태로 만들어 주는 작업

$$\text{제본료} = \text{기준단가} \times \text{페이지수} \times (1 + \text{가산비율})$$

>> 무사무선철 (본드제본), 반양장 (본드+실제본), 양장 (실제본)

(면당)

(단위 : 원)

판 형	무 사 무 선 철	반 양 장	양 장
4×6배판 (16절)	0.974	1,134	1,617
4×6 판 (32절)	0.771	0,915	1,347
국 배 판 (10절)	1.683	1,980	2,886
국 판 (25절)	0.798	0,968	1,382
크라운판 (18절)	0.869	1,049	1,491

주)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m<sup>2</sup>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로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 / 반양장 : 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 : 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간지와 본문의 지질이 동일하거나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 □ 일반관리비

○ 전체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

## □ 이윤

○ 용지대, 외부위탁작업비 등을 제외한 전체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

## □ 적용율

○ 읍셋인쇄의 경우 85% 범위 내에서 단가적용

>> 법령집, 단순복사, 대량인쇄의 경우 낮은 적용율 산정 필요



## □ 인쇄요금산정

$$\text{계산식} = \text{면수} \times [50\text{부까지 금액} - \text{조판감액} + 10\text{부금액} \times (\text{전체부수} - 50) \div 10]$$

(인쇄면당)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문용지	15,080	132	25절	신문용지	5,510	72
	중 질 지	15,270	157		중 질 지	5,540	74
	백 상 지	15,370	183		백 상 지	5,580	80
10절	신문용지	11,960	122	32절	신문용지	4,150	47
	중 질 지	12,040	140		중 질 지	4,160	50
	백 상 지	12,150	157		백 상 지	4,190	55
16절	신문용지	8,070	81				
	중 질 지	8,120	91				
	백 상 지	8,180	101				

신문용지	중질지	백상지
<p><b>신문용지</b></p> <p>개포 저층아파트 최고35층 재건축</p> <p>“韓·아부 모하메드 왕</p>	<p><b>중질지</b></p> <p>其他 参考資料</p> <p>其他 参考資料</p>	<p><b>백상지</b></p> <p>회계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획</p> <p>회계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계획</p>

## ○ 조판료 감액표

구 분	조판생략 감액 <sup>(1)</sup>	조판생략 감액 <sup>(2)</sup>	조판생략 감액 <sup>(3)</sup>
8 절	8,560	6,690	4,420
10 절	6,780	5,150	3,500
16 절	4,620	3,470	2,380

- 주) (1)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 예시) 16절, 500p, 1000부, 백상지, 글자의 크기나 행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원고를 제출한  
 경우 본문 인쇄가격은?  

$$\Rightarrow 500p \times [8,180 - 2,380 + 101 \times (1000-50)/10] = 7,697,500\text{원}$$

## □ 표지요금

### ○ 인쇄료

경인쇄 계산식 = 매수(크기+색상+용지+기타) × [50부까지 금액 + 10부금액 × (전체부수-50) ÷ 10]

- 크기 : 8절 책자(5매), 10절 책자(5매), 16절 책자(3매)
- 색상 : 2색도(2.5매), 3색도(5매), 4색도(7.5매)
- 용지 : 아트지 및 레자크지(2.5매)
- 기타 : 코팅(5매)

▶ 예시) 1000부, 8절, 칼라(4색), 아트지, 코팅안된 표지의 인쇄가격은?  

$$\Rightarrow (5매+7.5매+2.5매) \times [15,370+183 \times (1,000-50) \div 10] = 491,325\text{원}$$

## □ 적용율

- 경인쇄(마스터인쇄)의 경우 이윤이 기준요금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에 80%이하의 단가 적용(500만원 이상시)
- 법령집, 단순복사, 대량인쇄의 경우 보다 낮은 적용율 산정 필요

## □ 주의사항

- 경인쇄 기준요금은 재료비(용지 및 부재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임

## 5

## 견적서 서식

## (1) 읍셋인쇄(예시)

순번	품명	산출내역	금액	비고
1	용지대	표지 $[1,500 \div (6 \times 500)] \times 142,849 \times (1+0.23)$	87,852	
		본문 $[1,500 \times (600 \div 2) \div (16 \times 500)] \times 26,592 \times (1+0.16)$	1,735,128	
		면지 $[1,500 \times (8 \div 2) \div (16 \times 500)] \times 133,410 \times 1$	100,057	
2	조판료	표지	0	
		본문 $600 \times [(10,050 - 2,380) \times 1.4]$	6,442,800	
		기타		
3	필름 출력비	표지 $6,020 \times 4 \times 6$	144,480	
		본문 $2,010 \times 2 \times 600$	2,412,000	
		기타		
4	인쇄판대	표지 $20,890 \times 4 \times (1 \div 6)$	13,369	
		본문 $14,498 \times 2 \times (600 \div 16)$	1,087,350	
		기타		
5	읍셋 인쇄료	표지 $1,500 \times 39.05 \times 4 \times 1$	234,300	
		본문 $1,500 \times 14.35 \times 62 \times 1$	1,334,550	
		기타		
6	제본료	$0.974 \times 600 \times 1,500$	876,600	
7	기타			
8	일반관리비	$(1+2+3+4+5+6=14,468,486) \times 10\%$	1,446,848	
9	이윤	$(2+3+4+5+6+8=13,992,297) \times 20\%$	2,798,459	
소계			18,713,793	
적용율		85%	15,906,724	
공급가액			15,906,724	
부가세			1,590,672	
총액		*천원미만절사	17,497,000	

(2) 경인쇄(예시)

인 쇄 내 역			
품 명	안전행정부 사례집		
규 격	16절		
부 수	1,000부		
면 수	500page		
표 지	색상( <u>칼라</u> , 흑백)	지 질( <u>아트지</u> , 레자크지, 백상지)	코팅(유, <u>무</u> )
본 문	지 질( <u>백상지</u> , 중질지, 신문용지)		
조판생략 여부	<u>조판생략감액3번</u> (글자의 크기나 행간조정)		
산 출 내 역			
구 분	산 식		금 액
표 지	$(5\text{매}+7.5\text{매}+2.5\text{매}) \times [15,370+183 \times (1,000-50) \div 10]$		491,325
내 지	$500\text{p} \times [8,180 - 2,380 + 101 \times (1,000-50) \div 10]$		7,697,500
소 계			8,188,825
적용율	80%		6,551,060
부가 가치세	10%		655,106
합 계	천원미만 절사		7,206,000